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2-01

# 행정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전북의 충청권 연계협력방안 연구

이성재 김상엽 오병록 한국환





Jeonbuk Institute

기획연구

2022-01

# 행정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전북의 충청권 연계협력방안 연구

이성재 김상엽 오병록 한국환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이성재	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 연구	김상엽	연구위원	제5장 일부
	오병록	부연구위원	제3장
	한국환	전문연구원	제2장

---

자문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관리 코드 : 21GI1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및 도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충청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발적 성장 요인이 부족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충청권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효과를 전북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이 중요
- 본 연구는 행정수도 이전·확장의 효과가 전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세종시 기반 충청권과 전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주요 부문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및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2년~2030년,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광역 연계협력 사례 분석,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충청권과의 연계협력 방안 등
-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한 해외사례의 주요 특징과 최근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사례의 계획 내용을 분석해 시사점 도출
- 전북과 충청권의 기존 광역단위 권역 검토와 충청권의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전북의 과제를 도출하고, 전북과 충청권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로 광역적 발전방안, 광역 연계 SOC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와 자연생태 및 문화 자원 활용, 산업 연계 등 부문별 연계협력 사업 제시

## 2.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 1) 행정수도 개요 및 현황

-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을 통해 충남 연기·공주 지역을 입지로 확정(2004년 8월)한 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2004년 10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5년 3월) 후, 합헌 결정(2005년 11월)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2007년 7월)되었으며, 2012년부터 총 5단계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약 2만 명이 이전(2020년 8월 기준)
-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4대 비전과 도시건설 6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사회문화 인프라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등이 추진 중

### 2) 행복도시·세종시 관련 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7)은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 간 네트워크형 광역 계획권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4+1 개발축을 제시하고,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억제하기 위해 연담화관리 녹지축 설정
-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기존 계획 권역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으로 목표 설정
-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은 행정도시, 자족도시, 상생도시, 교류도시, 친환경도시를 미래 상으로 설정하고, 도시개발 축, 산업 및 연구개발 축, 관광·휴양 축, 수변·생태 축 제시
-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의 새로운 중심, 도시 패러다임을 이끄는 미래도시 선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공공·행정, 미래산업, 그린·스마트, R&D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

### 3. 광역 연계협력 사례

#### 1) 해외사례

- 브라질은 1960년 내륙으로 수도를 이전했는데 주변 지역에 불량주택이 출현하자 주변 지역에 8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계획 초기 단계부터 수도 이전에 따른 거점지역과 배후 위성도시의 기능이 동시에 고려되지 못한 한계 내포
- 독일은 도시 중심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1개의 도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했으며, 이 중 Quadriga 도시네트워크는 소규모 지역들간 연대 후 주변의 상위지역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추진해 나간 성공 사례

#### 2) 국내외사례

- 국내에서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의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권은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21.4월)

#### 3) 시사점

- 지역 간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광역단위 전략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구체화된 세부 부문별 계획 수립 필요
- 각 도시별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동시에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축 설정 또는 벨트화 전략 마련 등 기능 분담 및 연계가 중요하며, 연계협력 대상은 상호경쟁 자원 보다는 상호보완 자원을 중심으로 고려 필요
-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광역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 필요

## 4.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 1) 기존 광역권역 검토

- 기존 광역권역은 초광역벨트와 문화·관광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총 6개의 초광역벨트 중 전북과 충청권이 함께 설정된 벨트는 서해안신산업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내륙벨트 등 3개의 벨트
- 전국의 광역단위 문화권역 3개 중 전북과 충청권이 포함된 권역은 백제문화권이며, 관광권역은 총 8개소이며, 충청권과는 서해안관광벨트, 서부내륙관광광역관광개발에 포함
- 기존에 전북과 충청권에서 추진해온 광역권역은 남북축 2개(해안 중심의 서해안신산업벨트 및 서해안관광벨트, 백두대간축 중심의 백두대간내륙벨트)와 X축 2개(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서부내륙권·지리산권,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크게 4개의 축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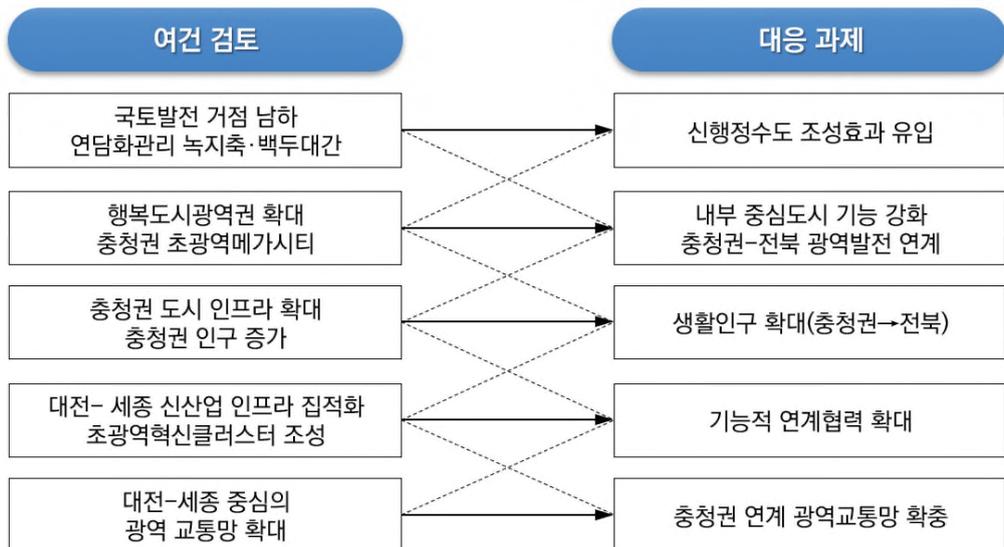


### 2) 충청권 여건 변화

-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청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세종 중심의 광역 SOC 확대로 국토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세종시와 대전의 R&D를 연계한 국가 신산업 인프라가 집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을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연대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발전 거점으로서 위상 강화
- 국토발전 거점으로 부상할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에 비해 전북과 지리적 인접성이 개선됨에 따라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접 지역에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및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내부 중심도시 기능이 미흡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

### 3) 대응 과제

- 국토발전 거점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남하하고, 세종시와 수도권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축과 세종시 동측의 백두대간 등을 고려하여 신행정수도 조성효과가 남측 방향인 전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응
- 행복도시 광역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함에 따라 전북의 도시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전북을 연계한 광역 차원의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고,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기반 인프라 확대 등으로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인접한 전북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 필요
- 그리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인프라가 집적되고, 기존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충청권 초광역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연계협력을 확대시키고,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망과 연계한 충청-전북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양 지역의 접근성 제고 및 산업·문화 등 부문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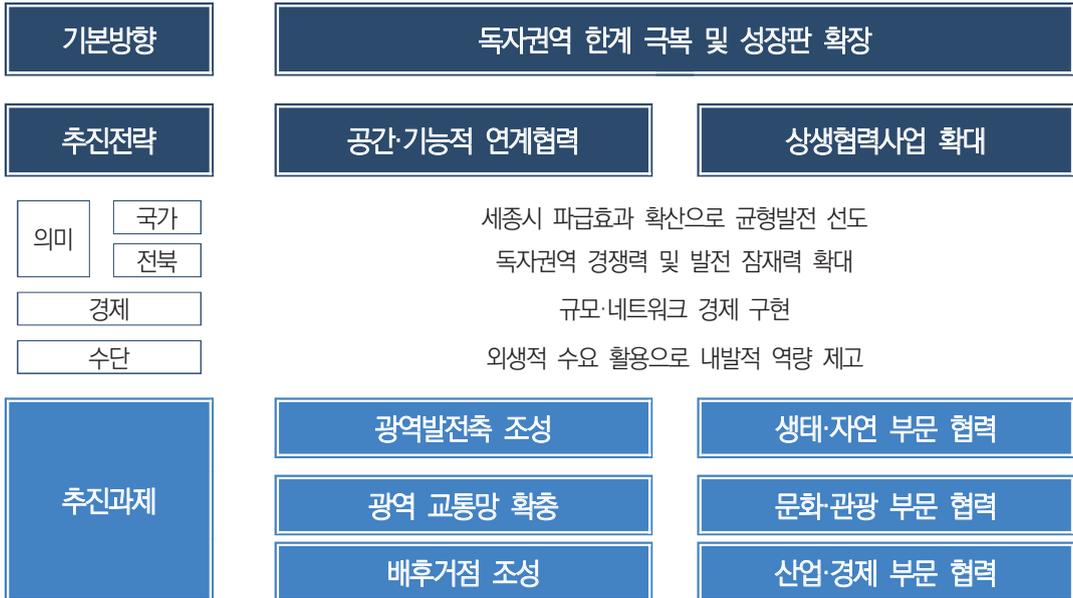


## 5. 충청권 연계협력 방안

### 1) 기본 방향

- 전북의 위상과 정체성을 인정받아 독자권역인 강소권으로 설정되었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도시가 없어 지역의 성장 및 발전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초광역 정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독자권역의 한계 극복
-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남하하는 국토발전 거점 이동에 따른 신행정수도의 파급효과를 전북으로 확산·유입시켜 전북의 성장판 확장
-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 행정수도의 파급효과 확산의 제약(연담화관리녹지축, 백두대간 등)과 충청권과 인접한 전북의 지리적 강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초광역 협력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충청권과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중요

### 2)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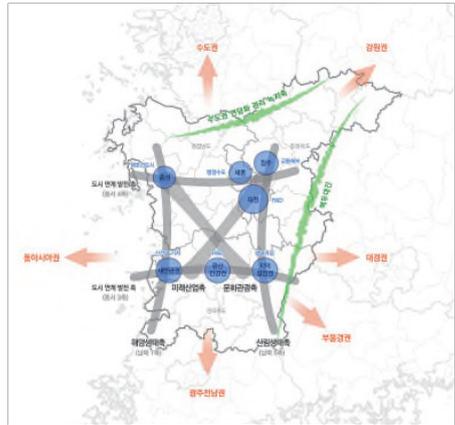


### 3) 추진 과제

#### ■ 광역발전 축 조성

- 내부 광역화 :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 내부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부 광역화가 필요하며, 내부광역화는 생활권, 도시기능,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완산만경권, 새만금권, 지덕섬진권, 노령동진권으로 설정
- 광역발전 축 : 내부 도시 간 연계 발전 축(동서 축, ⇔), 해양·산림 생태 축(남북 축, ⇕), 산업·문화 축(사선 축, 2X) 조성

- 내부 도시 연계 축 : 충청권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 중심지와 충남도청이 이전해 새롭게 조성된 내포 신도시권을 연계, 전북은 새만금권과 완산만경권을 연계해 단일 경제권을 형성시키고 파급효과를 지덕섬진권으로 확산시키는 전북의 도시발전 축 조성
- 해양 축 : 충남과 전북이 보유한 갯벌, 습지 등 기존 해양 생태자원의 공동 이용·활용을 통한 광역화 추진
- 산림 축 :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정맥(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과 주요 산림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고, 양 권역의 훼손지 복원 및 단절된 생태축 연결로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
- 산업 축 : 전북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탄소소재 산업과 충청권의 탄소 기반 융복합 산업 수요와 연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충청권 공급, 고령친화형 바이오산업 공동 육성, 과학기술 R&D 및 실증 연계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혁신성장 도모
- 문화관광 축 : 고대 역사적 공동자원과 연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자산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과학기술”이 구현되고, 역사문화자원의 선(線)적 연계로 문화산업의 네트워크 경제 선도



#### ■ 광역 교통망 확충

- 새만금~혁신도시 국도 승격 및 확장, 전주~군산 산업도로 8차로 확장, 내부 광역순환교통망 등 내부 광역화 지원 교통망 구축

- 서해안 철도, 세종 ~ 익산(연무IC)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착공,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대전~전주간 복선전철 신설 등 충청권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 ■ 배후거점 조성

- 균형발전 연계·거점으로서 세종시의 역할 강화와 신행정수도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전북으로 확산시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행정수도 배후 생태문명 거점 육성, 리모트 워크(remote work) 거점 조성

### ■ 생태·자연 부문 연계협력

- 금남정맥 생태문화 명소화 : 충청권과 전북을 산맥으로 연결하는 금남정맥의 생태문화 자원의 경제적 자산화 및 주변 지역의 인문·사회 자원을 융합시켜 생태문화 명소화 추진(금남정맥 트레일, 금남정맥 에코힐링 뮤지엄, 금남정맥 생태인문마을 등)
- 금강 생태환경 복원·활용 : 장수군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유입되는 금강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금강 핵심 생태축 및 조류 서식지 조성, 4계절 습지 및 체험·관찰 공간 조성, 금강변 생활문화 복원, 금강비단 자전거 테마 루트화, 금강천리 투어 상품 개발·운영)

### ■ 문화·관광 부문 연계협력

- 디지털 汎백제 문화관광권 : 고대 백제문화권의 장소성을 지닌 “부여·공주(충남)+익산(전북)”의 역사문화자원을 디지털화시켜 하나의 역사문화 공동체로 연계하고 글로벌 디지털 걸치를 확산시키는 汎백제 역사문화관광권 형성
-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유산벨트 : 전북, 충청권 지역내 분포한 고대~근대에 이르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인 인문정신 문화와 유형적(有形的), 시각적(視覺的) 유산의 연계 벨트 구축(시와 술과 차가 있는 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인문호국정신 문화 K-DH(Digital Humanities) 기행벨트)

## ■ 산업·경제 부문 연계협력

- 신소재 산업벨트 : 전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수소 기반의 에너지 소재와 탄소를 활용한 부품소재 산업을 충청권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전북의 성장동력 극대화
  - 수소산업 : 친환경산업단지(전북+세종),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실증(전북+세종), 수소산업 광역화(전북+충남)
  - 탄소산업 : 초광역 탄소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전북+세종+충남+충북)
- 고령친화 바이오 융복합산업 벨트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해진 고령친화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바이오 기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과 충청권의 바이오 자원과 융복합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령친화 바이오 융복합사업 벨트 조성(고령친화 식품·화장품, 디지털 바이오융합 혁신플랫폼 등)
-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벨트 : 전북과 충청권에서 추진중인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와 공동으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한 새만금을 활용한 국가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신산업 벨트 조성

## 4) 추진방식

- 양 지역에 공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생태·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을 시작하여 마중물로 활용하는 한편, 양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문화관광,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 등으로 협력 범위 및 내용을 확대
- 소프트웨어 중심의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연계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별 추진
  -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전북과 충청권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양 지역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공동행사, 학술포럼 등을 추진
- 연계협력을 위한 여건과 기반이 마련된 후 R&D, 사업주체 양성 등 본격적인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연계협력 분야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등으로 진행
  - 초기 단계의 사업은 공통 테마에 대한 DB 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집중하고, 향후 자원개발을 통한 제품생산, 상품화, 공동이용 시설 조성 등 휴먼웨어 및 하드웨어 부문으로 확대

---

# 차 례

## CONTENTS

---

요 약 .....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가. 연구 배경 ..... 3
- 나. 연구 필요성 ..... 4
- 다. 연구 목적 ..... 5

2. 연구 범위 및 내용 ..... 5

- 가. 연구범위 ..... 5
- 나. 연구 주요내용 ..... 5

---

### 제2장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1. 행정수도 개요 및 현황 ..... 9

- 가. 행정수도 추진경위 ..... 9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 10

2. 행복도시·세종시 관련 계획 ..... 16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16
- 나.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 18
- 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 20
- 라.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 22

제3장      광역 연계협력 사례

1. 해외 사례 ..... 25

    가. 브라질 수도 이전 ..... 25

    나. 독일 도시 네트워크(Quadriga) ..... 26

    다. 네덜란드 란트스타트 ..... 27

    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 28

    마. 미국 캘리포니아 메가리전 ..... 29

    바. 영국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 ..... 30

2. 국내 사례 ..... 31

    가. 충청권 메가시티 ..... 31

    나. 대구·경북 메가시티 ..... 32

    다. 부울경권 메가시티 ..... 33

3. 시사점 ..... 34

제4장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1. 기존 광역권역 검토 ..... 37

    가. 전북-충청 광역 권역 ..... 37

    나. 2+2 광역 축 ..... 39

2. 충청권 여건 변화 ..... 40

    가. 세종시 출범 : 충청권 인구 증가 ..... 40

    나. 대전-세종 중심의 광역 SOC 확대 : 국토 중심기능 제고 ..... 41

    다. 세종시-대전 연계 : 산업인프라 집적 ..... 42

    라. 세종시-충청 광역화 : 초광역 메가시티 ..... 42

3. 대응 과제 ..... 43

---

### 제5장 충청권 연계협력 방안

1. 기본방향 .....	47
가. 독자권역 한계 극복 .....	47
나. 전북의 성장판 확장 .....	47
2. 추진 전략 .....	48
가. 공간·기능적 연계협력 .....	48
나. 상생협력사업 확대 .....	48
3. 추진 과제 .....	49
가. 광역발전 축 조성 .....	49
나. 광역 교통망 확충 .....	53
다. 배후거점 조성 .....	61
라. 생태·자연 부문 연계협력 .....	63
마. 문화·관광 부문 연계협력 .....	67
바. 산업·경제 부문 연계협력 .....	69
4. 추진 방식 .....	74

참 고 문 헌 .....	75
---------------	----

[표 2-1]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역대 대통령 발언 .....	9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건설계획 .....	11
[표 2-3] 정부조직 내 세종시 이전 부·처('20. 8월 기준) .....	13
[표 2-4] 광역계획권 5개도시 거점도시 네트워크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	17
[표 2-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고시 .....	19
[표 2-6]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 .....	21
[표 4-1] 전북·충청권 인구변화 .....	40
[표 4-2] 전북·충청권 인구변화 .....	40
[표 5-1] 내부광역화 .....	49
[표 5-2] 호국 관련 유적 자원 .....	69
[표 5-3] 신소재산업 벨트 .....	70
[표 5-4] 충청권 연계협력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	73

---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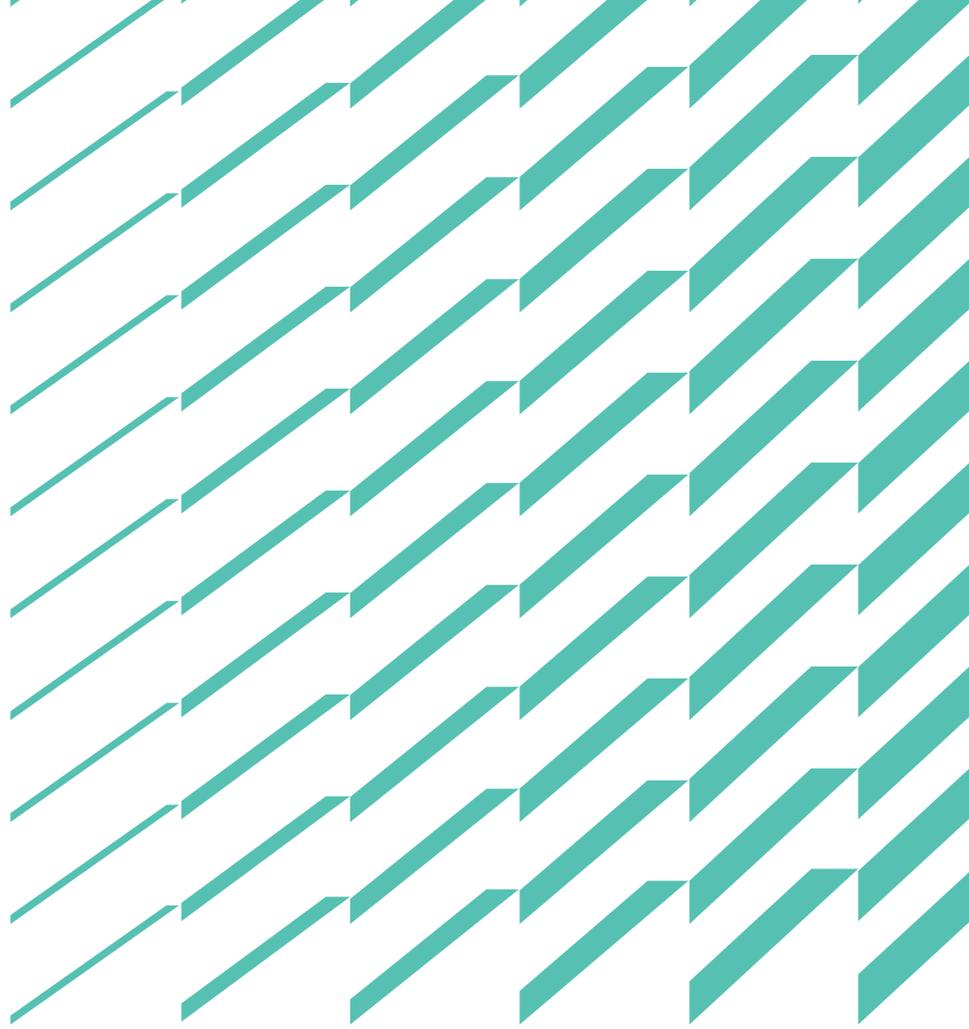
## LIST OF FIGURES

---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	10
[그림 2-2]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건설계획	11
[그림 2-3]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및 지구단위계획	12
[그림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사업현황	14
[그림 2-5] 스마트시티 개념	15
[그림 2-6] 블루-그린 네트워크	15
[그림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및 개발 축	17
[그림 2-8]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	19
[그림 2-9]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발전 축	20
[그림 2-10] 도시 발전축 구상도	21
[그림 2-11] 2030년 세종시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 구상	22
[그림 3-1]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 및 발전 축	31
[그림 3-2] 대구경북 3대 거점별 경제권	32
[그림 3-3] 동남권 광역철도망	33
[그림 3-4] 동남권 광역순환급행철도	33
[그림 4-1] 문화 권역	38
[그림 4-2] 관광 권역	38
[그림 4-3] 전북-충청 공동 권역	39
[그림 4-4] 행복도시권 광역도로망(안)	41
[그림 5-1] 내부광역화	50
[그림 5-2] 광역발전 축	52
[그림 5-3] 완산만경권과 새만금권 경제공동체	53
[그림 5-4] 새만금~혁신도시 국도 승격 및 확장	54
[그림 5-5] 전주~군산 산업도로 확장	55
[그림 5-6] 내부 광역순환교통망	55
[그림 5-7] 서해안 철도 및 충남-전북 연계사업	56

[그림 5-8] 세종 ~ 익산(연무IC) 고속도로 및 충남-전분 연계사업 .....	57
[그림 5-9] 세종 ~ 익산(연무IC) 고속도로 및 충남-전분 연계사업 .....	58
[그림 5-10]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	59
[그림 5-11] 대전~전주간 복선전철 신설 .....	60
[그림 5-12] 배후거점 조성 .....	62
[그림 5-13] 금남정맥 생태문화 명소화 .....	64
[그림 5-14] 고령친화(식품·화장품) 바이오 융복합산업 벨트 .....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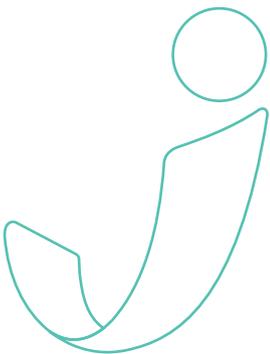




# 제 1 장

##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 제 1 장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다(2002년 9월). 그리고 「신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시행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sup>1)</sup>로 축소되었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세종청사의 단계별 이전 및 국책기관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다. 정부조직 내 부처(44개), 국책연구기관(15개), 공공기관(4개) 등 약 2만 명이 이전했다(2020년 8월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12년 출범 당시 113,117명에서 2021년 말 기준 371,895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3.3배 증가하고, 도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도시 규모 및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의 인구구조는 유소년 인구(0~14세) 및 경제활동 인구(15~64세) 비율이 각각 16.4%에서 20.1%, 68.4%에서 70.1%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KTX 오송역에서 세종청사 연결도로 개통,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행, 서울~세종 고속도로,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 등 광역 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주변지역의 접근성 또한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정치 기능까지 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sup>2)</sup>, 20대 대통령 당선인 또한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 
- 1)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수도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행정수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기능 중 청와대, 국회 등 정부부처의 정치·행정 기능이 모두 이전한 것을 의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의 모든 행정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행정 기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해왔지만 청와대와 국회 등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의적 개념으로 행정수도 용어를 사용했다.
  - 2) 국회 주관 행정수도 개헌 국민대토론회 개최('17년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20년 9월),

---

세종의사당 개원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국토발전의 거점이 남하하고, 행정수도 완성 논의 촉진 등으로 국토발전 축 상에서의 충청권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수도 확대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계되는 수충권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 나. 연구 필요성

세종시 건설의 주요 목적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후 세종시의 인구규모는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였으며, 수도권의 일자리는 51.3%(‘17년), 1,000대 기업은 73.6%(‘16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81.0%(‘15년)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광역시를 포함한 주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발적 성장 요인이 부족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효과를 전북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5+2 광역경제권은 전북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함께 호남권에 편입되었는데 시책 및 사업 등이 상호 경쟁관계인 부분이 많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반면 충청권과는 상호 보완관계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유리하고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신행정수도 조성이 지니고 있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동안 호남권으로 종속된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행정수도 확대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계되는 수충권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파급효과가 전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등 전북의 선제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다. 연구 목적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조성되고 정치, 경제, 문화,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행정수도의 도시 기능이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균형발전 역할론 확대 및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충청권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수도 이전·확장의 효과가 전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세종시 기반 충청권과 전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충청권과의 주요 부문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다.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가.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및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2년~2030년,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광역 연계협력 사례 분석,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충청권과의 연계협력 방안 등이다.

### 나. 연구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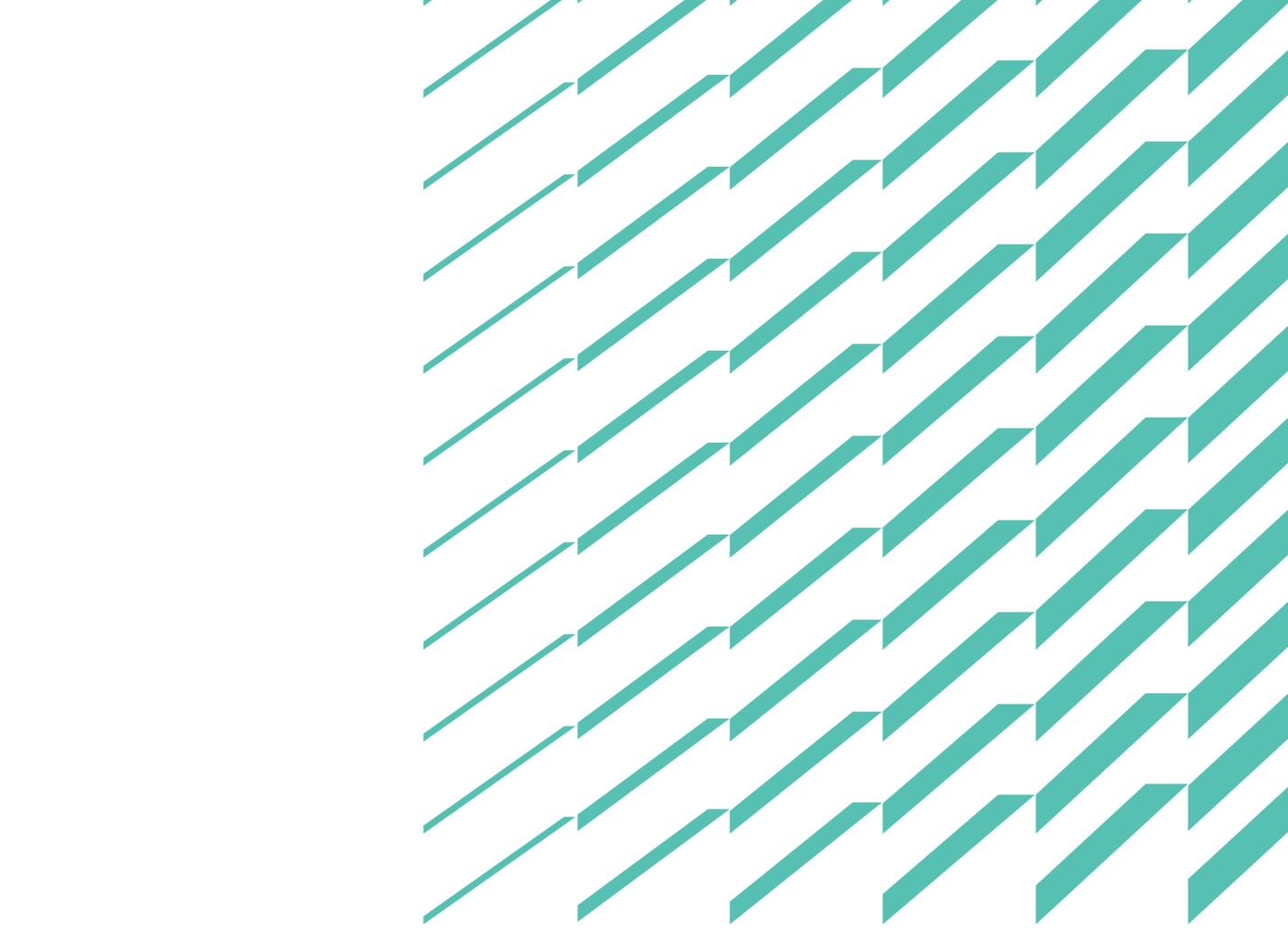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부문에서는 행정수도 조성 배경 및 목적, 추진 경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추진현황(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주요 인프라) 등 행정수도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 세종시 비전2030 중기발전 전략계획 등 행복도시·세종시 관련계획들을 검토했다.

광역 연계협력 사례 부문에서는 자차단체 연합을 통해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한 네덜란드,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의 주요 특징과 최근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사례(충청권, 대경권, 동남권)의 계획 내용 분석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충청권과 전북의 연계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부문에서는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기존의 초광역벨트, 문화관광 권역 등 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단위 권역을 검토하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청권의 인구변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광역 SOC, 산업생태계 변화 등 충청권의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전북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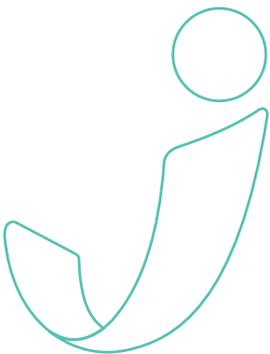
충청권 연계협력 방안 부문에서는 충청권과 전북의 성공적인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광역적 발전방안, 광역 연계 SOC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와 자연생태 및 문화 자원 활용, 산업 연계 등 부문별 연계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1. 행정수도 개요 및 현황
2. 행복도시 · 세종시 관련 계획





## 제 2 장 행정수도 현황 및 관련 계획

### 1. 행정수도 개요 및 현황

#### 가. 행정수도 추진경위

김영삼 대통령시절부터 행정수도 조성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고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후보 또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였다.(2002년 9월)

[표 2-1]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역대 대통령 발언

구분	관련 내용
김영삼 대통령(1992년)	11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김대중 대통령(1998년)	8개 청이 대전으로 옮겨가는데 지방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비대 방지 등의 큰 의미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2002년)	수도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2017)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자료 :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688\(2021.8.1.\)](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688(2021.8.1.))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시행 후, 충남 연기·공주 지역을 입지로 확정(2004년 8월)한 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다.(2004년 10월)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5년 3월) 후, 합헌 결정(2005년 11월)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되었다.(2007년 7월) 2010년 12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후,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거쳐 2012년부터 총 5단계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을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다. 1단계(2012년 12월)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복청 등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이전 하였으며, 2단계(2013년 12월)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

가보훈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3단계(2014년 12월)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4단계(2016년 9월)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5단계(2019년 8월)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하였다.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를 지칭하며, 도시조성 목적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세종특별자치시(465.23km<sup>2</sup>)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72.91km<sup>2</sup>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1/8 수준이다.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s://www.naacc.go.kr>)

[그림 2-1]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07년~'15년까지는 집중 개발을 유도하는 초기 단계이며, '16년~'20년까지는 자족기능 확충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자족적 성숙단계, '21년~'30년까지는 완성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표 2-2]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건설계획

단계	도입기능	유입인구(누적)	개발방향
초기 활력단계 ('07~'15)	중앙행정기능, 정부출연연구기능, 국제교류 및 문화	15만 명	초기 집중개발 유도 대중교통중심도로 완성
자족적 성숙단계 ('16~'20)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15만명(30만 명)	자족기능 중심의 개발확대 도시 기반시설의 확대설치
완성단계 ('21~'30)	기존 도입기능의 완비	20만명(50만 명)	주거지 확충 도시 기반시설의 완비

자료 : 국토교통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s://www.naacc.go.kr>)

[그림 2-2]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건설계획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4대 비전과 도시건설 6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4대 비전은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품격높은 문화·정보 도시이고, 6대 방향은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조화로운 민주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 재해에 안전한 도시, 편리한 선진 도시이다.

##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예정지역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앙에 위치한 대규모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이중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채택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총 6개 생활권역과 인구 2~3만 규모의 21개 기초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시구조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6개 생활권역 중 1생활권은 중앙행정기관 배치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2생활권은 상업, 국제교류, 문화 등 복합적인 기능 수행, 3생활권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행정 기능, 4생활권은 도시의 성장동력인 교육, 연구, 산업 협력 및 융합, 5생활권은 첨단의료산업 기반 생명공학 중심지, 6생활권은 첨단지식기반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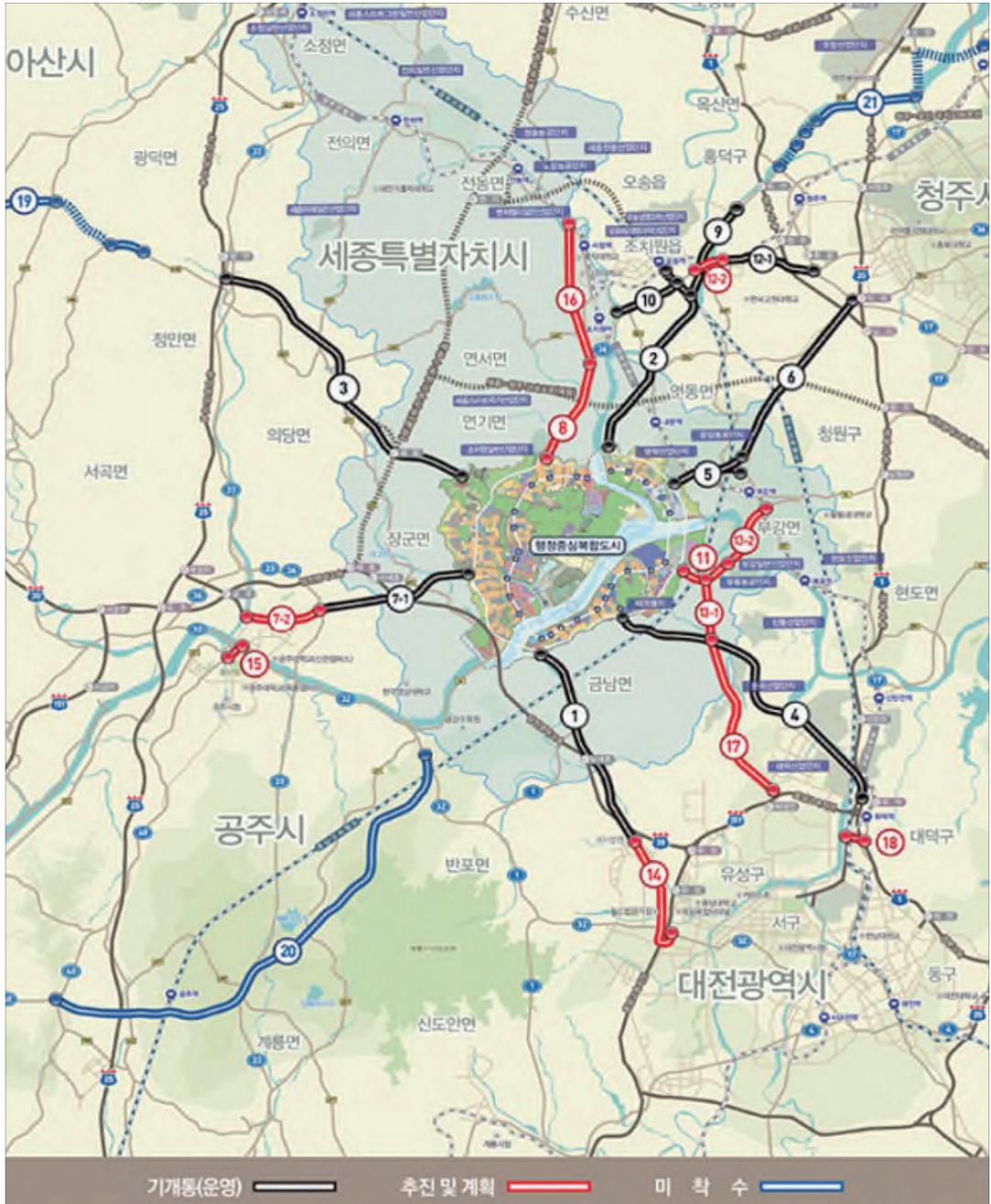
[그림 2-3]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및 지구단위계획

정부세종청사 등 44개 부처(15,267명), 국책연구기관 15개 기관(3,723명), 공공기관 4개(835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융합 연구 및 교육이 가능한 약 60만㎡ 규모의 캠퍼스(학생정원 3~4천명)가 조성 중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도로망 및 광역 BRT 구축, 전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등 도시기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광역도로망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내 주변도시(대전, 충북, 충남)를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164.86km)이 추진 중(‘21.11월 기준)이다.

[표 2-3] 정부조직 내 세종시 이전 부·처('20. 8월 기준)

구 분	입주시기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1단계 (15개)	'12.9월 ~12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국무총리비서실	
	'12.11월 ~12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행복청			
2단계 (16개)	'13.12월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해인문화홍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3단계 (5개)	'14.12월	법제처	-
		국민권익위원회	-
		-	우정사업본부
		국세청	-
		-	한국정책방송원
4단계 (5개)	'15.11월 ~'16.9월	재난안전관리본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방청	정부청사관리본부
5단계 (2개)	'19.2월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림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사업현황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 헬스케어·모빌리티·에너지·교육 등 7대 혁신요소를 중심으로 ICT 기술과 자연친화적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진 중이며, 7대 혁신요소는 교통(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헬스케어(원격진료, 드론활용 긴급구조 등), 교육(에듀테크, 메이킹 공간 등), 에너지(CEVS, 전력 거래, 제로에너지 건물), 문화(자율주행 쇼핑카트, 무인배송, 지역화폐 결제 등), 일자리(창업 인큐베이터센터, 해외도시 교차 실증 등), 거버넌스(디지털트윈, 블록체인 기반 M-Voting, 리빙랩 운영) 등이다.

또한 세종예술의 전당, 국립박물관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숲체험원(유아숲 → 행복도시형(공립) 숲 → 독일형 숲), 블루그린네트워크(중앙행정타운~중앙녹지공간) 등 사회문화 인프라를 추진 중이다.



[그림 2-5] 스마트시티 개념



[그림 2-6] 블루-그린 네트워크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2. 행복도시·세종시 관련 계획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sup>3)</sup>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인근 도시에 대한 광역적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어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계획의 미래상은 국제 수준의 문화 창달과 국제교류 기능을 담당하는 동북아 핵심도시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촉진하는 중추행정기능의 신 중심지, 중심도시간 첨단산업·연구개발·교육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도시혁신의 선도거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계획의 목표는 크게 3대 부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가 중추행정 기능의 적정배치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연계 혁신거점 구축, 청주국제공항의 적극 활용과 관련 국제 기능 도입, 국제교류 및 물류유통 기능 강화 등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 권역 형성이 첫 번째 목표이다. 두 번째 목표는 광역계획권의 '대한민국 대표문화' 브랜드화, 관광네트워크 구축, 광역계획권의 문화레저 수요 충족 및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네트워크 구현이다. 세 번째 목표는 지역 공간구조 관리 정책 수립, 녹지 및 수변공간의 보존·관리, 자연경관 보전 등을 우선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 친화적 교통시설 확충 및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및 난개발·연담화 방지이다.

공간 구조는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 간 네트워크형 광역 계획권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4+1 개발축을 설정하였다. 제1축은 행정도시에서 공주방향(서해안 및 충남신도청권 지향), 제2축은 행정도시에서 계룡방향(호남권 지향), 제3축은 행정도시에서 대전도심을 지나는 방향(영남권 지향), 제4축은 행정도시에서 청주·청원을 지나 진천·증평 방향(강원권 및 충북 내륙권 지향)이다. 그리고 경부축에 대한 개발 집중과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담화를 억제하기 위해 연담화관리 녹지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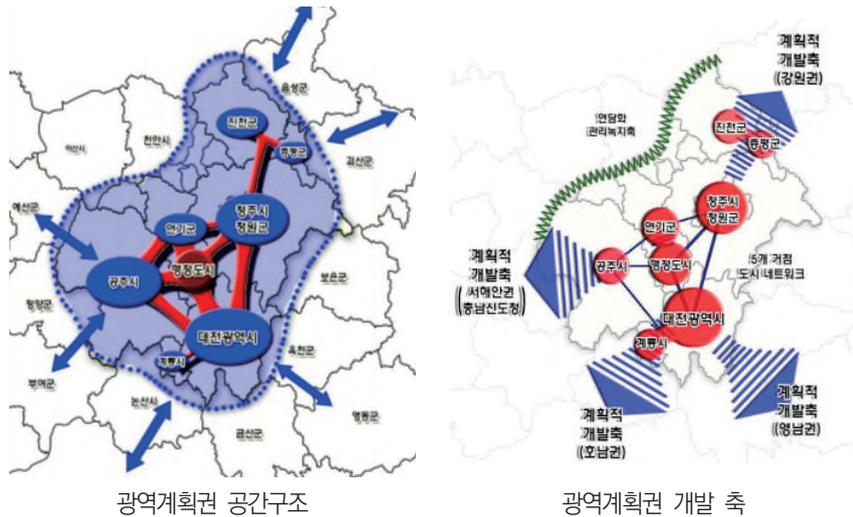
---

3) 국토교통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표 2-4] 광역계획권 5개도시 거점도시 네트워크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권역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광역계획권 전체	· 수도권 수준의 국가중추행정,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 · 거점도시별 특화 기능으로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 형성
행정도시 연기군	· 행정도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지식산업, 교육연구 기능 등 광역계획권 내의 중추도시로 육성 · 연기군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적 서비스 기능 보완 및 동반 성장 추진
대전광역시 계룡시	· 중앙행정 및 국방, 과학기술R&D, 금융, 상업, 물류 등 광역적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 ·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의 국토균형발전 촉진기능 선도
청주시 청원군	· 국제교류 및 광역적 도시 서비스 기능 보완 ·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 역할 수행 (진천·증평 > 청주·청원 > 연기·행정도시 > 공주 > 대전)
공주시	· 서해안 및 충남신도청예정지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 결절점으로 설정 · 성장동력산업의 산업적 기반 보완 및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해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
진천군 증평군	·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설정 · 혁신도시 및 증평 항공우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혁신거점 역할 수행

자료 : 국토교통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p.42



자료 : 국토교통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그림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및 개발 축

## 나.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sup>4)</sup>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16~'20) 마무리 시점에서 충청권의 5개 광역도시계획권(대전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청추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중첩에 따른 계획내용의 정합성 미흡, 거점도시의 기능 편중심화,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의 규모 확대 수요 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미래상은 세계적 광역거점, 융복합산업 국가중추거점, 초광역경제권의 새로운 모델로 설정하였으며, 세계적 광역거점은 글로벌 과학연구·국제교류·문화예술·국가행정중심, 융복합산업 국가중추거점은 4차산업혁명기술, 탄소중립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융복합거점, 초광역경제권의 새로운 모델은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 간 상생발전이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 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으로 설정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 국토중추는 포용적 국토발전 위한 新 국가중추의 역할 도모, 혁신과 성장 거점으로서 중부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이끄는 균형발전 선도 광역권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며, 新 광역생활경제권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광역생활경제권으로 육성,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 형성, 지역생활권의 경제거점으로 정비·재편이다. 그리고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은 도시간 기능분담과 광역거점시설간의 교통연계, 광역시설의 공동설치 및 이용, 탄소중립, 미세먼지, 인구감소 등 행복도시권의 주요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광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심지 체계는 광역 중심도시와 광역기초도시로 재정립하여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 중심都市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내포신도시(홍성·예산), 천안시로 광역적 중심도시 역할 수행, 국토의 다른 지역과 행복도시권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기초都市는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으로 광역중심도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한다.

4) 국토교통부(2021),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표 2-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고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대전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전역, 충청남도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전역	
면적	3,598km <sup>2</sup>	12,193km <sup>2</sup>	증) 8,595km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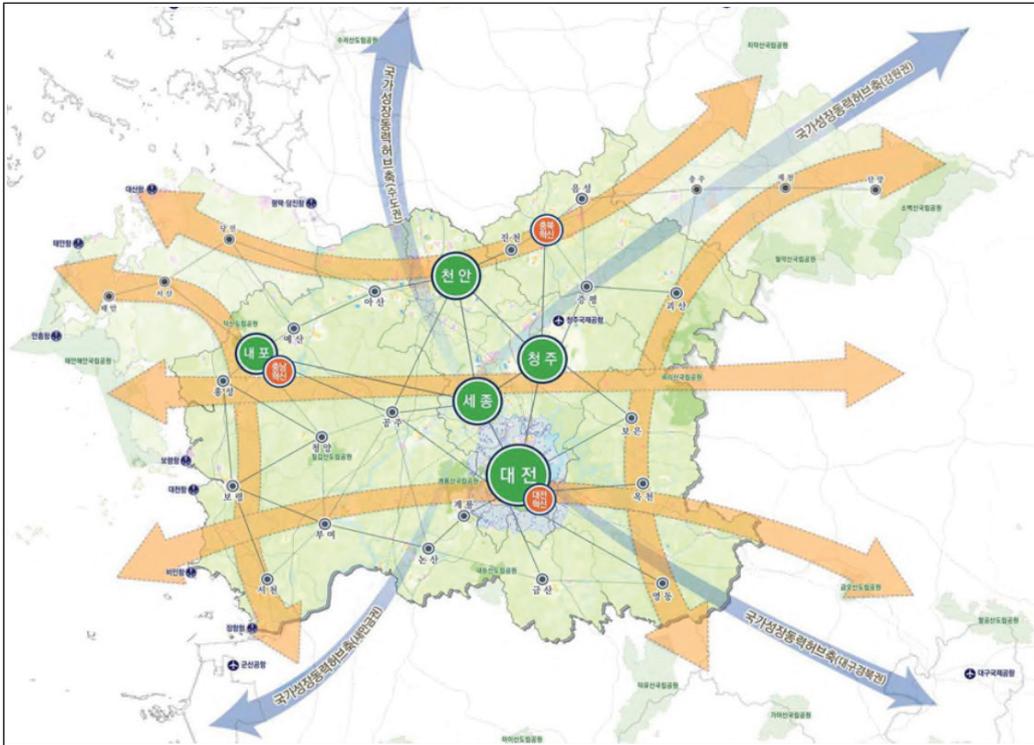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02호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4.6.),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그림 2-8]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

발전 축은 R&D·지식산업 선도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중심기능이 주변 지역과 연계, 대도시 세력권의 동서축 연계, 국가 서해안축과의 동반성장 유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국가발전 축(국가 성장동력 허브 K축)은 행복도시권의 중심과 수도권, 강원권, 새만금, 대구·경북 등 주변 성장허브 지역을 연결하여 내륙 저발전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중소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축이다. 동서 발전 축(미래 신산업과 도시 간 및 해양·산악 연계발전 축)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기능을 체계적으로 수용, 서해안의 해양관광과 백두대간의 산악관광 연계, 농수산업 식품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축이다. 남북 발전 축(해양 신산업 육성 및 백두대간 여가환경 축)은 서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신산업지대를 연계, 백두대간의 고유 산악자원의 보전을 기반으로 여가 환경지대를 조성하는 축이다.



[그림 2-9]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발전 축

#### 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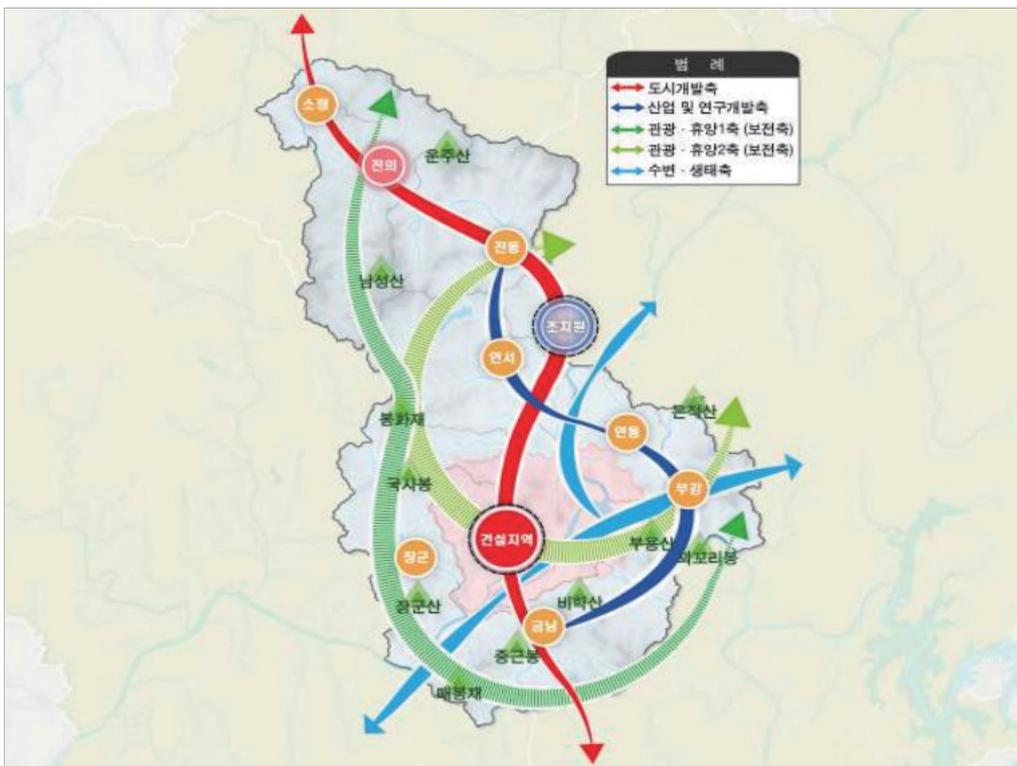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2014년 세종시의 미래상 및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였다. “어울림과 창조의 일류도시 세종”의 슬로건을 가지고 5 가지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제시하였으며, 미래상은 국가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도시,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 역사·문화·사람·과학이 소통하는 교류도시, 경제·산업이 역동하는 자족도시,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친환경도시 등이다.

5) 세종특별자치시(2014), 2030세종도시기본계획

[표 2-6]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

미래상	핵심이슈
국가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도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주심기능 수행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의료복지 기능 담당
지역·세대·계층간 조화로운 상생도시	생활권간 연계 및 교류 강화, 읍면지역과 건설지역의 유기적 연계 도·농 통합형 도시로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역사·문화·사람·과학이 소통하는 교류도시	국제교류거점 조성, 전통문화 및 체험형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간·프로그램 제공 첨단과학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경제·산업이 역동하는 자족도시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첨단 R&D 연구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신성장 기반 마련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친환경도시	자연친화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친환경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실현 도시·생태·환경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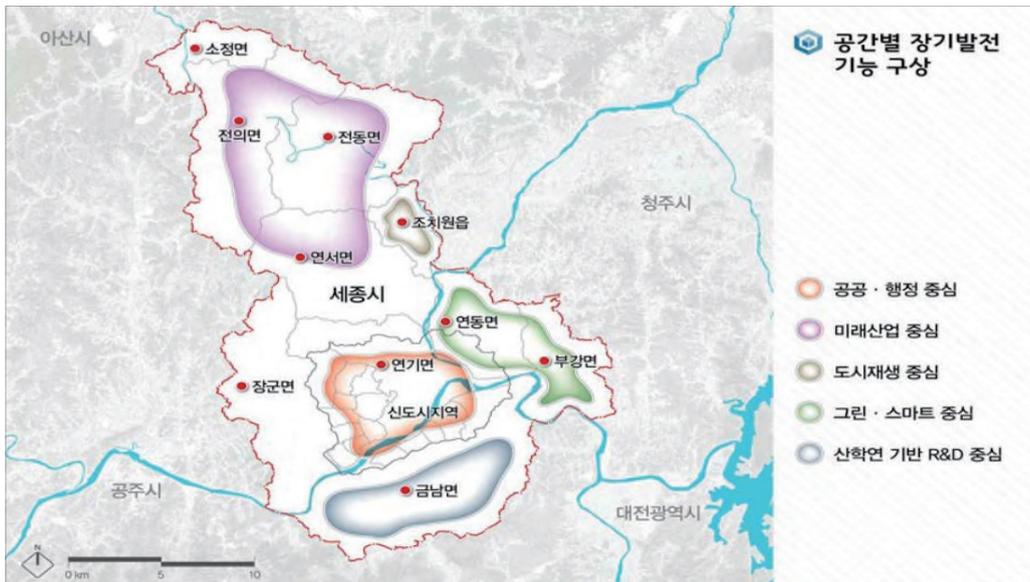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p.72.

[그림 2-10] 도시 발전축 구상도

## 라. 세종특별자치시 비전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6)

4대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의 새로운 중심, 도시 패러다임을 이끄는 미래도시 선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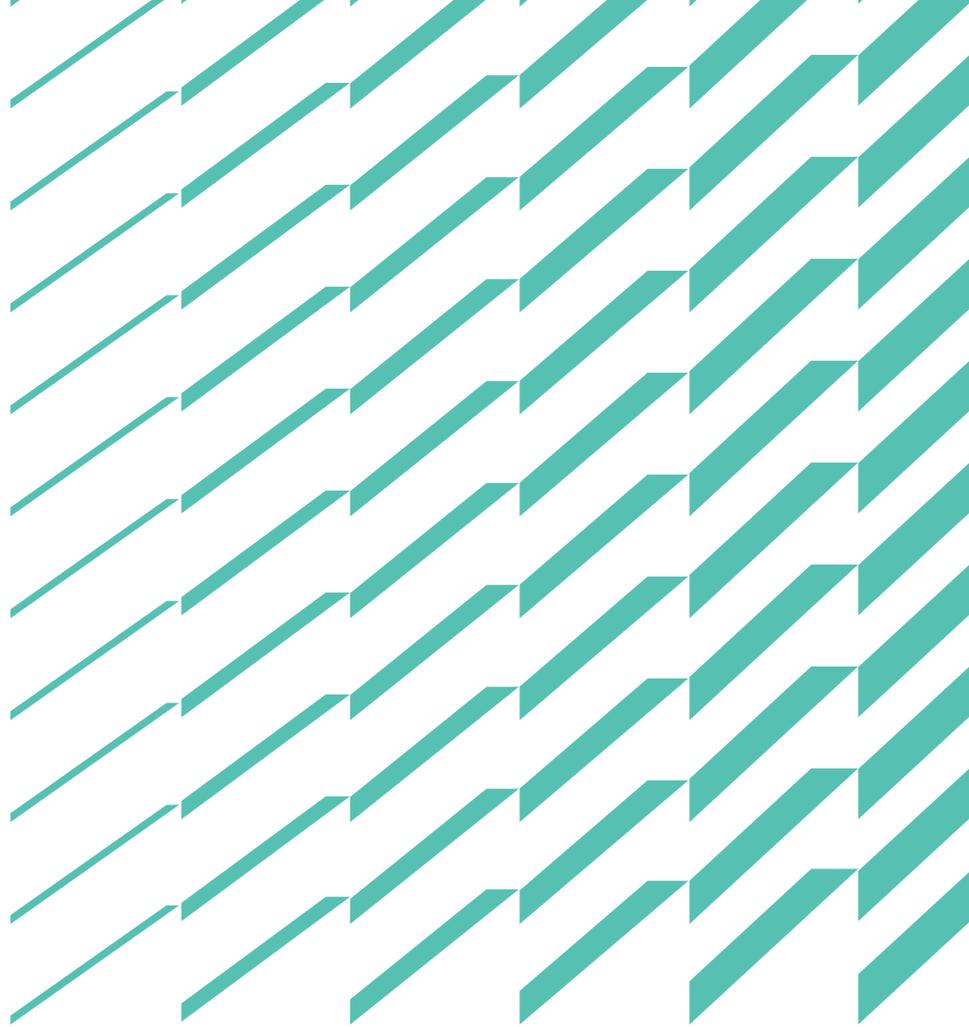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은 공공·행정, 미래산업, 도시재생, 그린·스마트, R&D 등으로 구분되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중심, 세종시 북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중심, 청춘 조치원 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 중심, 5생활권과 연계하고, 연동면·부강면으로 확대되는 그린·스마트 중심, 4생활권의 연구단지, 대학교 등과 연계한 산학연 기반 R&D 중심이다.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6),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p.84.

[그림 2-11] 2030년 세종시 공간별 장기발전 기능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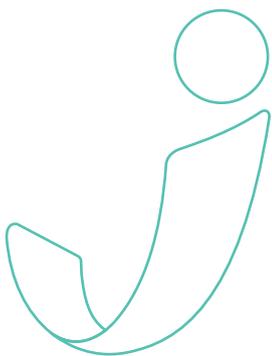
6) 세종특별자치시(2016),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 제 3 장

## 광역 연계협력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 제3장 광역 연계협력 사례

### 1. 해외 사례

#### 가. 브라질 수도 이전

##### ■ 지역 개요

해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내륙지역의 성장거점을 확보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세의 침략 및 재난 등에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1960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이전 하였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여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비행기 모양의 도시구조 형태를 갖도록 계획하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년만에 건설을 완료했으며, 목표인구 50만 중 약 40%인 20만명 규모의 도시를 형성하였다.



##### ■ 주요특징

신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변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불량주택이 출현하자 정부는 이를 합법화시켜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에서 약 15~40km 떨어진 지역에 8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하였다. 브라질리아와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하는 인구 200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했으나 브라질리아는 자생적인 도시기반 형성이 미흡하며 위성도시와 주변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공간 구조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직주의 원거리화에 따른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혼잡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계획 초기 단계부터 수도이전에 따른 거점지역과 배후 위성도시의 기능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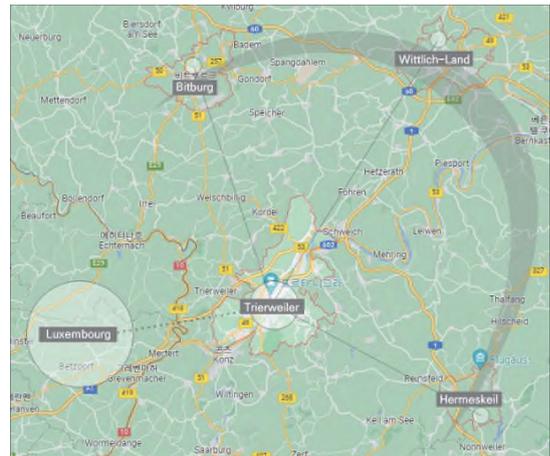
## 나. 독일 도시 네트워크(Quadriga)

### ■ 지역 개요

도시 중심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모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11개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자율성, 균등성, 공동목표, 정체성, 확실성 지양, 다원성, 연속성, 명확한 역할, 공간영향력, 지역 연관성 등 10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도시 네트워크 모델에 적용하였다. 11개 모델 중 Quadriga는 소규모 지역의 중심지들과 주변의 중소도시, 그리고 보다 규모가 큰 도시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 주요특징

Quadriga 도시네트워크는 소규모 도시의 중심지인 Wittlich(빗틀리히), bitburg(빗부르크), Hermeskeil(헤어메스카일) 3개 지역간 연대를 형성한 후 상위 기능을 담당하는 Trier(트리어) 지역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룩셈부르크의 도시들까지로 확장되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문화, 관광, 교통 등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우선 협력 후 범위를 확대시켰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소규모 지역 거버넌스, 광역 거버넌스, 총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 단계적·점진적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다. 네덜란드 란트스타트<sup>7)</sup>

### ■ 지역개요

네덜란드 서부지역에 위치한 란트스타트(Randstad)는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헤이그, 로테르담, 유트레히트 등이 다이아몬드형으로 입지해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도시이다. 네덜란드 전체 면적의 16% 이지만 인구는 약 47%,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 ■ 주요특징

란트스타트 내의 다수의 도시들이 독립적이고 기능별로 특화되면서도 각 지역들을 따라 형성된 하천과 도로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하였다. 광역적 거버넌스 기반의 상생형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도시의 시정부, 지방의회, 공사, 시민단체, 개인 등이 고루 참여함으로써 상향적, 비공식적, 수평적, 그리고 상호 간의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남부 광역도시권과 북부 광역도시권 간의 상호협력과 관련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광역행정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레지오 란트스타트 등 정책 위계별 맞춤형 거버넌스도 운영되고 있다.



도시별 산업·경제적 분업과 전문화, 상호보완적 관계 유지를 통해 광역도시권으로 성장하였는데 로테르담(117만 명)은 공항, 항만, 기업본사, 대학도시, 국제무역, 암스테르담(135만 명)은 관광, 레저, 예술, 은행, 무역, 헤이그(105만 명)는 행정, 정치, 관광, 컨설팅, 유트레히트(34만 명)는 도로·철도 허브, 무역, 컨설팅, 대학도시를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다.

7) 김창석(2008), 황혜란(2018)을 참고하여 정리

란트스타트 내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항과 항만 등 거점 인프라 외에도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 간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유럽 내에서도 상위권의 교통인프라로 평가 받고 있다.

## 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sup>8)</sup>

### ■ 지역개요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인 간사이경제권은 중앙집권 체제와 도쿄 1극 집중 타파를 통한 분권형 사회 구현을 위해 2010년 발족했는데 국내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월)에 따라 부울경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현재 총인구 약 2,200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약 17%에 달하고 지역총생산도 일본 전체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정 체계를 가진 일본에서 매우 진전된 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주요특징

9개 지역(2시·2부·5현) 참여하고 있으며 간사이경제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체화된 교통·물류 운영·관리와 광역단위의 7개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개 분야 광역 사무는 광역방재, 광역 관광·문화 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연수 등이다.

8) 김창석(2008), 최길수(2017)을 참고하여 정리

특히 간사이경제권의 광역산업 진흥을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총 13개의 지역산업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클러스터는 나가하마 바이오, 시가 의공제후, 교토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교토 생명혁신, 간사이 문화기술연구도시, 고베 의료산업도시, 돗토리 바이오 전선, 도쿠시마 건강행복 혁신 등이 주요 기능이다.

## 마. 미국 캘리포니아 메가리전<sup>9)</sup>

### ■ 지역 개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메가리전은 San Francisco Bay Area, Sacramento Area, Monterey Bay Area, Northern San Joaquin Valley 등 4개 지역(21개 자치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농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는 1,220만명 수준으로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며, 미국 내 경제성장이 높은 3대 메가지역에 해당된다.



### ■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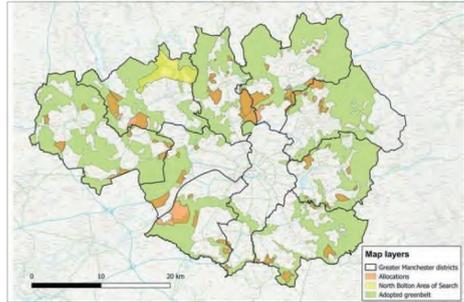
메가리전의 성장 요인 중 첫째는 지역 내 자본과 상품 등의 이동으로 지역 간 연계 및 교류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지리적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이며, 이는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는 첨단기술기반 산업 중심의 성장 패턴과 지역별 핵심산업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특정 분야의 성장이 도심 내 핵심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San Francisco Bay Area는 기술기반, 서비스 중심의 전문 직종 관련 산업, Sacramento Area는 정부 업무 및 교육관련 기관과 기능, Northern San Joaquin Valley는 무역, 운송, 배송 관련 기능, Monterey Bay Area는 농업 관련 기능이 핵심산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9) 대전세종연구원(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를 참고하여 정리

## 바. 영국 광역 맨체스터 도시권<sup>10)</sup>

### ■ 지역 개요

맨체스터시와 주변 9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2014년 1월 결성), 이로 인해 자발적 협력관계에 의한 도시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권 (Statutory City-Region)으로 개편했다. 대도시 지역에서 협력에 기반하여 수립된 최초의 전략 공간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주요특징

10개 지자체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주택, 교통, 인력훈련 등의 기능이 도시권 내 올바른 입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고용, 주택과 토지수요량 및 계획된 개발 규모 충족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공급에 집중했다. 도시기본계획(Local Plan)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GMSF는 그린인프라, 주택 유형 등 광역적 이슈를 포함하며, 여타 보완적 계획(Transport Strategy 2040, Residential Growth Strategy 등)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체계도 높게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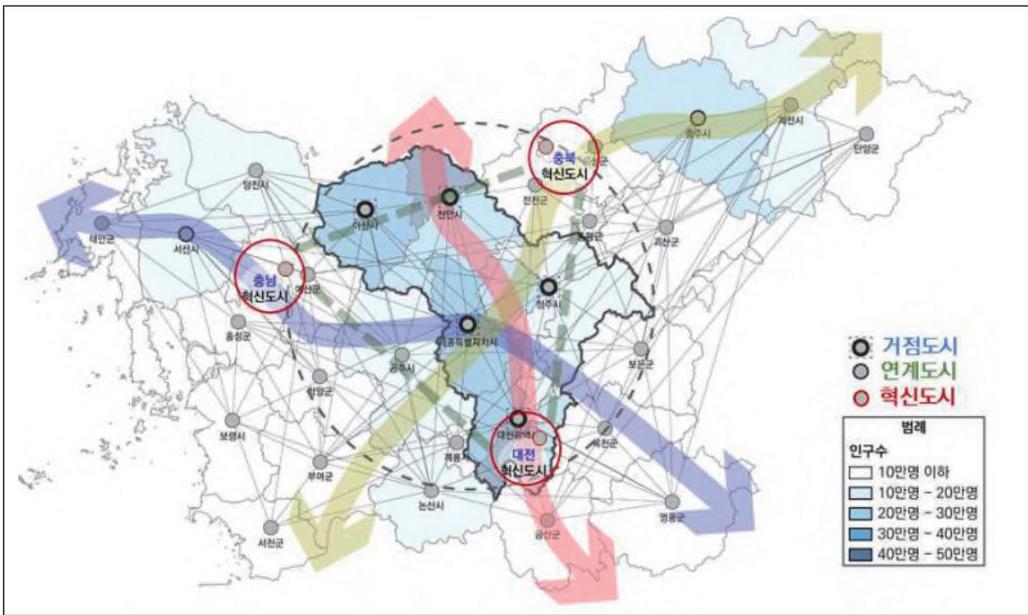
10) 전라북도(2018), 전라북도 광역협업협력사업발굴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

## 2. 국내 사례

### 가. 충청권 메가시티 11)

충청권 지역 차원의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에 대한 필요성 증가와 충청권 내 지역격차 해소, 지자체 간 공동번영 및 동반성장 도모를 위해 광역생활경제권 계획을 수립하였다.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공간구상은 네트워크 도시권역의 발전 축과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권역 차원 도시·지역 간 공간적·기능적 위계 설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초광역 발전축과 연결망 설정,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3050 교통생활권 등이 세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자료 :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2021),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

[그림 3-1]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 및 발전 축

11) 대전·세종·충북·충남(2021),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



### 다. 부울경권 메가시티 13)

지역으로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없는 구조의 고착화 및 격차 확대가 악순환 되는 상황에서 교통, 산업, 생활이 연계되어 있고 하나의 뿌리라는 정서적 동질감에 기반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남권 상생협약을 체결('18.6월)한 후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19.3월),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비전 위원회 출범('19.12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20.3월~'21.3월), 경남지사 대통령 보고('20.10월)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21.4월) 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전에 3개 지역이 설정한 목표는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단일 경제권 구축을 위한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이며, 동남권 내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산도시권, 울산도시권, 창원도시권으로 구분하여 거점 권역을 설정하였다. 향후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서쪽으로는 진주시(남중 중추도시권광역권)로 확장하는 확대광역권을 구상하였다. 경제통합에 기반 한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형성하기 위해 광역 SOC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3] 동남권 광역철도망



[그림 3-4] 동남권 광역순환급행철도

13) 부산·울산·경남(2020),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참고하여 정리

### 3. 시사점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약 8년 동안 상호 연구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간 합의를 도출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간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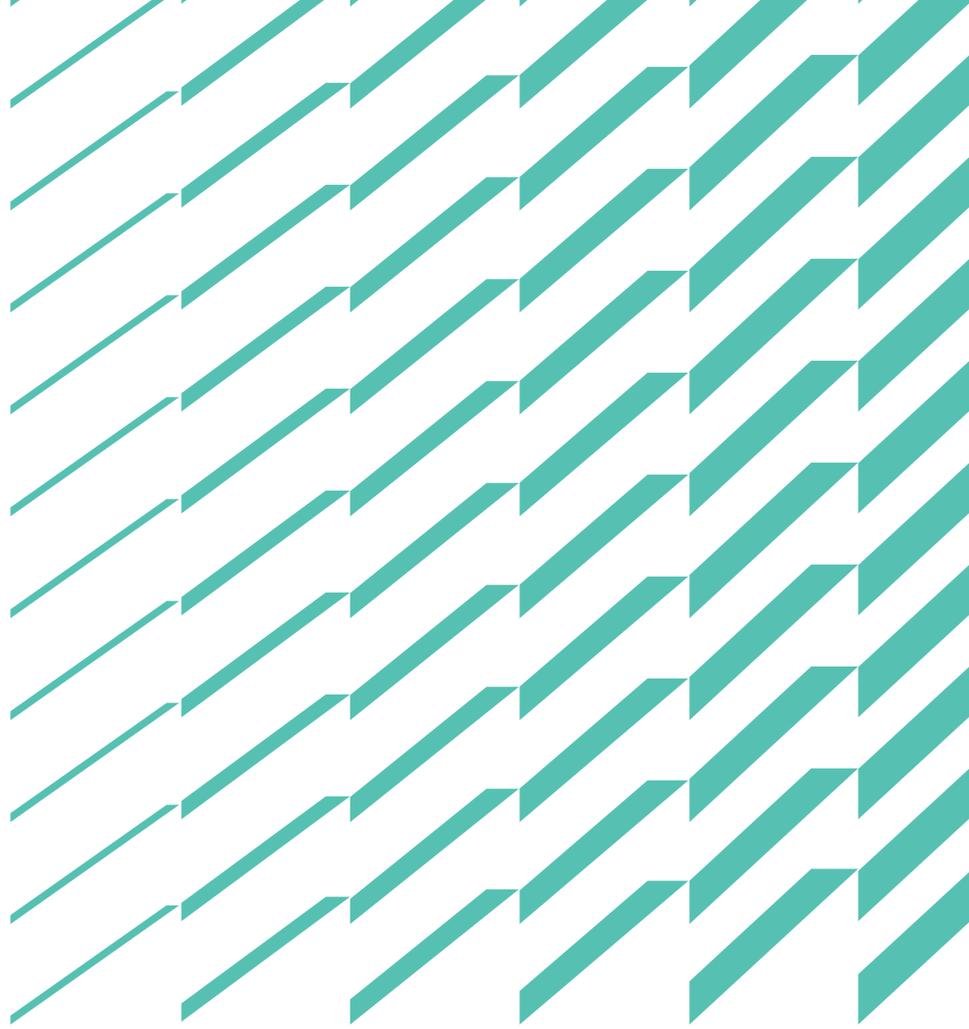
둘째, 시도 경계를 초월한 양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전략 공간계획 및 보완적 계획과 같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광역단위 전략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구체화된 세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발전 프레임 속에서 지역 내 발전방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 도시별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동시에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축 설정 또는 벨트화 전략 마련 등 기능 분담 및 연계가 중요하다.

넷째, 연계협력 대상은 상호경쟁 자원 보다는 상호보완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양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공동 이용·활용해야 한다. 상호 경쟁 부문을 무리하게 연계하기보다는 상호보완 성격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양 지역 모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을 따라 형성된 하천, 도로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하고, 각각의 지역에 공통적으로 입지한 산림자원, 수자원 등을 활용한 선진 사례처럼 전복과 충청권에 걸쳐 입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광역 인프라가 선결조건이다. 지역 내 자본과 상품의 원활한 이동, 노동시장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들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교통망 연계는 권역 내 핵심도시 간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광역교통망 연계로 지역 내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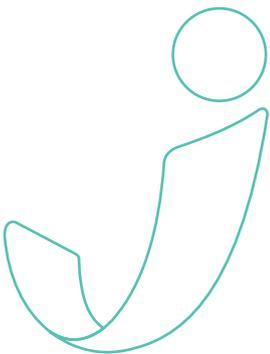
여섯째,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광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간의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추진해나간 란트스타트처럼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의체는 물론 세부 분야별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복과 충청권이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연계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 제4장

###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1. 기존 광역권역 검토
2. 충청권 여건 변화
3.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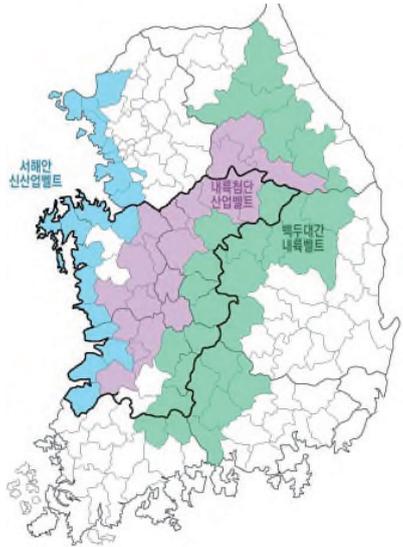
## 제 4 장 연계협력 여건 및 과제

### 1. 기존 광역권역 검토

#### 가. 전북-충청 광역 권역<sup>14)</sup>

전북과 충청권은 산업, 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양 지역이 공동으로 포함된 광역사업을 추진했으며, 권역은 초광역벨트와 문화관광 관련 권역으로 구분된다. 초광역벨트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에 따라 대외개방형 국토발전을 선도하고, 5+2 광역경제권을 보완하는 국토성장 축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었으며, 문화관광 관련 권역은 문화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광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초광역벨트의 총 6개 권역 중 전북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내륙벨트 등 3개의 권역에 해당된다. 서해안신산업벨트는 4개 시도, 25개 시군이 해당되며,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3개 권역의 공간발전 구상이 제시 되었으며, 추진전략은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 외 연계 인프라 구축이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6개 시도, 26개 시군이 해당되며,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4대 추진전략이 제시 되었으며, 추진전략 : 내륙첨단산업 특화거점 육성, 연구개발 중추 클러스터 구축, 첨단산업과 역사가 어우러진 내륙문화관광지대 조성, 권역간 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이다. 백두대간내륙벨트는 6개 시도, 28개 시군이 해당되며, 백두대간권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4대 추진전략이 제시 되었으며, 추진전략은 생태계 보전·복원 및 현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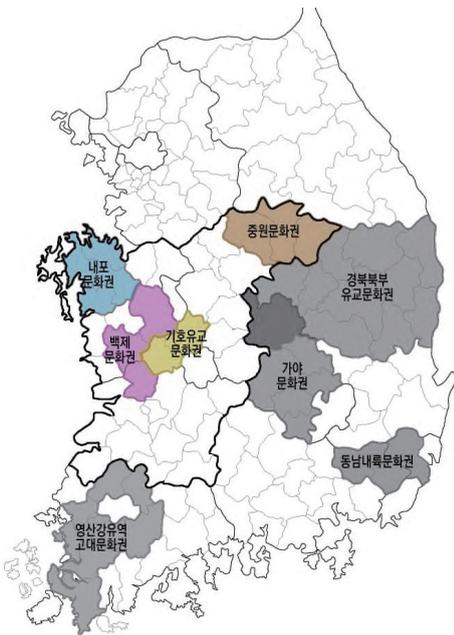


14)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 광역협력사업발굴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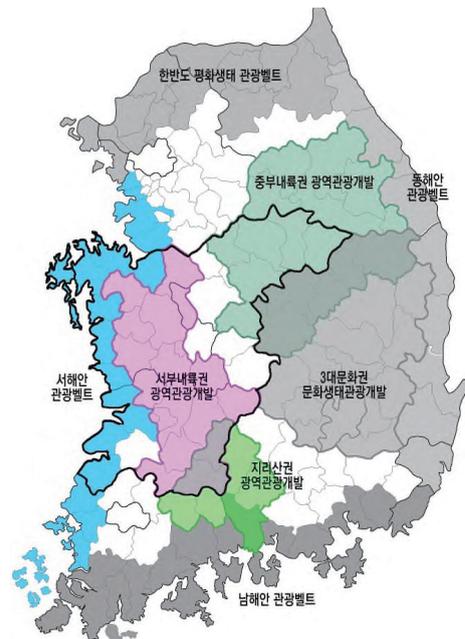
이용, 자연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조성,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 강화이다.

문화권역은 중원문화권,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광역], 기호유교문화권[광역],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동남내륙문화권[광역]문화권역 등 8개이며, 이중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권역은 백제문화권(전북·충남), 기호유교문화권(대전·충남), 동남내륙문화권(울산·경남) 등 3개 권역이며, 전북은 백제문화권에 해당된다.

광역관광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남해안 관광벨트, 서해안 관광벨트,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개발계획,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권역 등 총 8개소이며, 전북은 서해안 관광벨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등 3개 권역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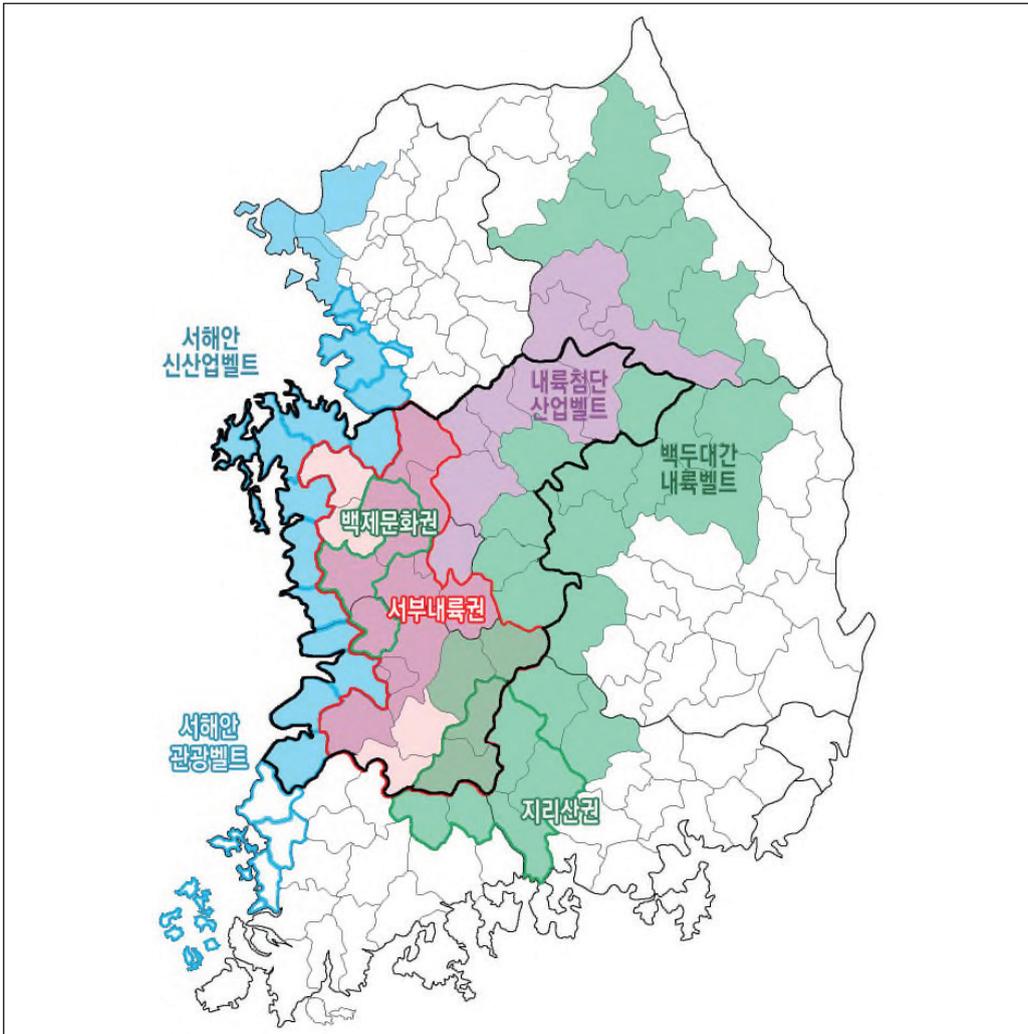
[그림 4-1] 문화 권역



[그림 4-2] 관광 권역

## 나. 2+2 광역 축

기존에 전북과 충청권이 공동으로 포함되어 추진해온 광역권역은 크게 4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남북축 2개(해안 중심의 서해안신산업벨트와 서해안관광벨트, 백두대간축 중심의 백두대간내륙벨트)와 X축 2개(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서부내륙권·지리산권, 내륙첨단산업벨트)이다.



[그림 4-3] 전북-충청 공동 권역

## 2. 충청권 여건 변화

### 가. 세종시 출범 : 충청권 인구 증가

세종시 인구는 '12년 출범 당시 113,117명에서 '21년 371,89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으며,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인구 또한 5,232,105명에서 5,540,830명으로 5.90% 증가했다. 반면, 전북은 동 기간 1,873,341명에서 1,786,855명으로 4.62% 감소했다.

[표 4-1] 전북·충청권 인구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2	2015	2018	2021	증감량	증감율
충청권	5,232,105	5,391,260	5,529,596	5,540,830	308,725	5.90
대전광역시	1,524,583	1,518,775	1,489,936	1,452,251	-72,332	-4.74
세종특별자치시	113,117	210,884	314,126	371,895	258,778	228.77
충청북도	1,565,628	1,583,952	1,599,252	1,597,427	31,799	2.03
충청남도	2,028,777	2,077,649	2,126,282	2,119,257	90,480	4.46
전라북도	1,873,341	1,869,711	1,836,832	1,786,855	-86,486	-4.62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시와 충청권의 순이동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259,462명, 충청권은 282,929명 증가한 반면, 전북은 동 기간 63,322명 감소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순이동 및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광역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충청권의 도시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2] 전북·충청권 인구변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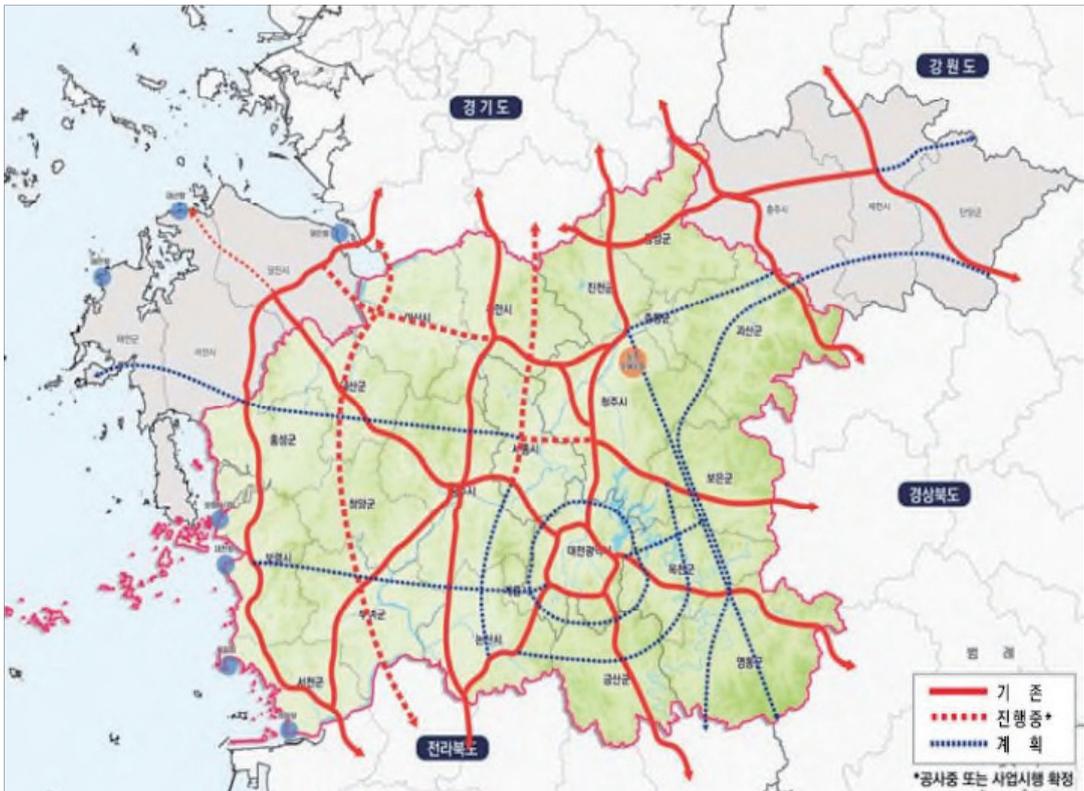
구분	2012	2015	2018	2021	증감량
충청권	32,482	44,138	31,913	17,138	282,929
대전광역시	499	-20,616	-14,753	-8,931	-106,573
세종특별자치시	17,493	53,044	31,433	14,085	259,462
충청북도	4,641	1,438	5,149	3,462	33,462
충청남도	9,849	10,272	10,084	8,522	96,578
전라북도	-3,291	-2,830	-13,773	-5,801	-63,322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나. 대전·세종 중심의 광역 SOC 확대 : 국토 중심기능 제고

대전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 국토에서 균형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간선도로망(7×9)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및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도로망,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내포신도시와 지역 내 주요 도시 연결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다.

충청권 내에 위치한 주요 거점시설(청주국제공항, 공주 KTX역, 보령항 등)의 광역교통망을 연계 확충하고, 항만 및 공항을 중심으로 국가물류거점 육성을 강화함에 따라 국토발전의 중심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그림 4-4] 행복도시권 광역도로망(안)

---

## 다. 세종시-대전 연계 : 산업인프라 집적

세종시로 다양한 고급인력과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되고, 세종시와 대전시를 중심으로 대전의 R&D를 연계한 세종벤처벨리,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등 신산업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세종-대전 간 국가 신산업 인프라가 집적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에서는 글로벌 첨단인력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주도할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세종시-대전 중심의 첨단산업 융복합 허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세종시-충청 광역화 : 초광역 메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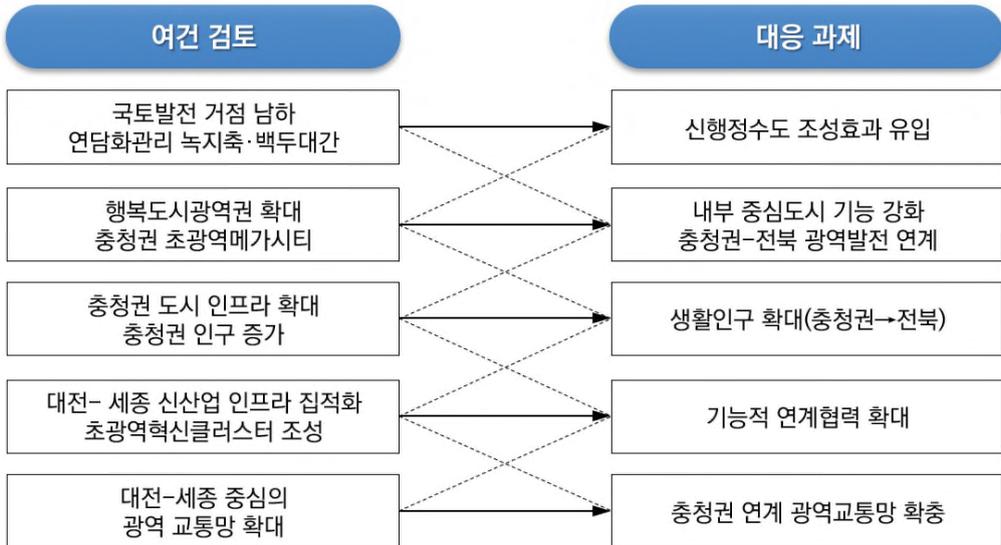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을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연대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초광역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발전 거점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발전 거점으로 부상할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에 비해 전북과 지리적 인접성이 개선됨에 따라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접 지역에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및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내부 중심도시 기능이 미흡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한다.

### 3.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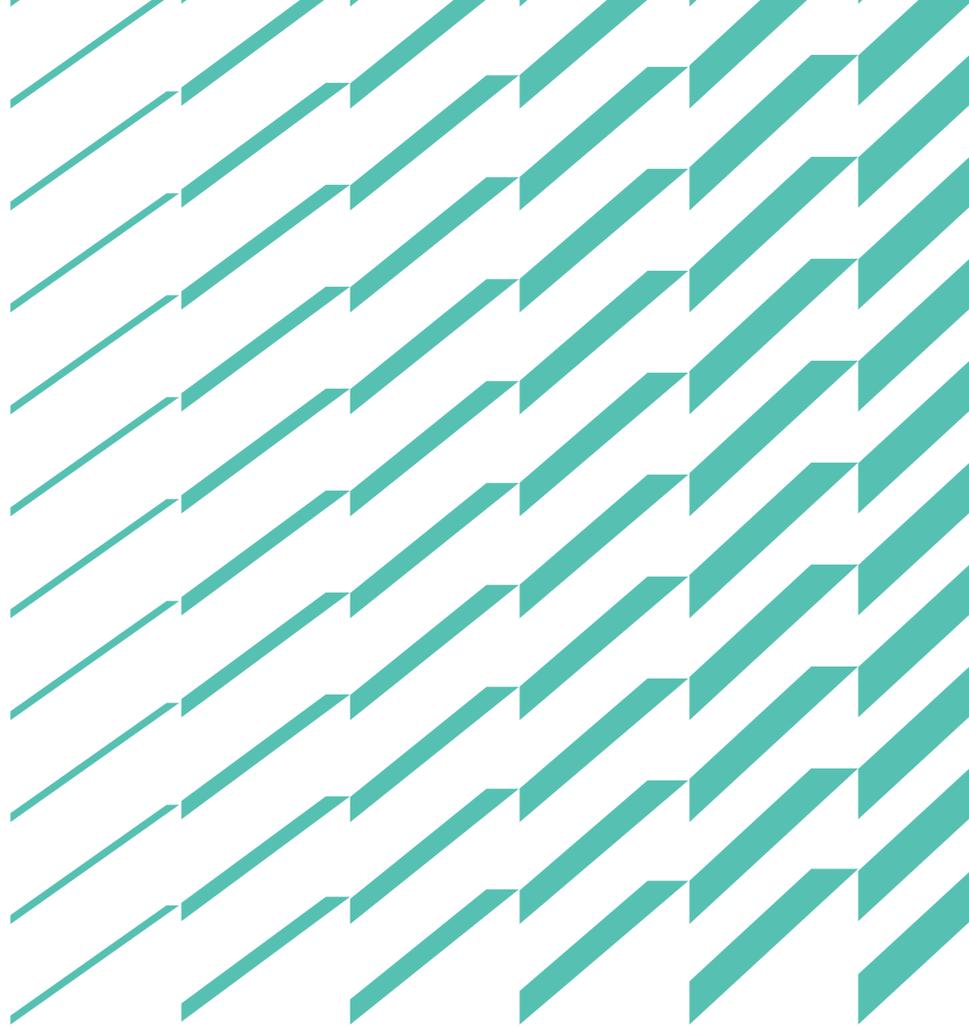
국토발전 거점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남하하고, 세종시와 수도권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축과 세종시 동측의 백두대간 등을 고려하여 신행정수도 조성효과가 남측 방향인 전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행복도시 광역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충청권 4개 광역 시도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함에 따라 전북의 도시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전북을 연계한 광역 차원의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고,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기반 인프라 확대 등으로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인접한 전북으로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인프라가 집적되고, 기존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충청권 초광역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연계협력을 확대시키고,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망과 연계한 충청-전북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양 지역의 접근성 제고 및 산업·문화 등 부문별 연계협력 활성화를 지원 전략도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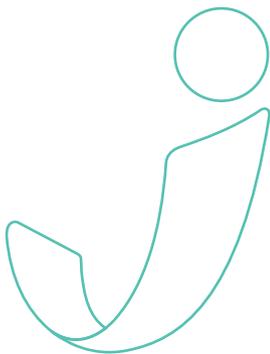




# 제5장

## 충청권 연계협력 방안

1. 기본방향
2. 추진 전략
3. 추진 과제
4. 추진 방식





## 제 5 장 충청권 연계협력 방안

### 1. 기본방향

#### 가. 독자권역 한계 극복

전북의 위상과 정체성을 인정받아 독자권역인 강소권으로 설정되었으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구심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도시가 없어 지역의 성장 및 발전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초광역 정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도시 인프라, 인적 자원 등 내적 역량 보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충청권의 사람과 자본 등 외생적 수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광역적 접근의 정책이 중요하다.

충청권의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응하고 상호보완적 성장을 위해 전북과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과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광역적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나. 전북의 성장판 확장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남하하는 국토발전 거점 이동에 따른 신행정수도의 파급효과를 전북으로 확산·유입시켜 전북의 성장판을 확장시켜야 한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 행정수도의 파급효과 확산의 제약(연담화관리녹지축, 백두대간 등)과 충청권과 인접한 전북의 지리적 강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초광역 협력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충청권과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전북과 충청권이 공유하고 있는 자원 또는 협력 가능한 자원의 공동 이용·개발을 통한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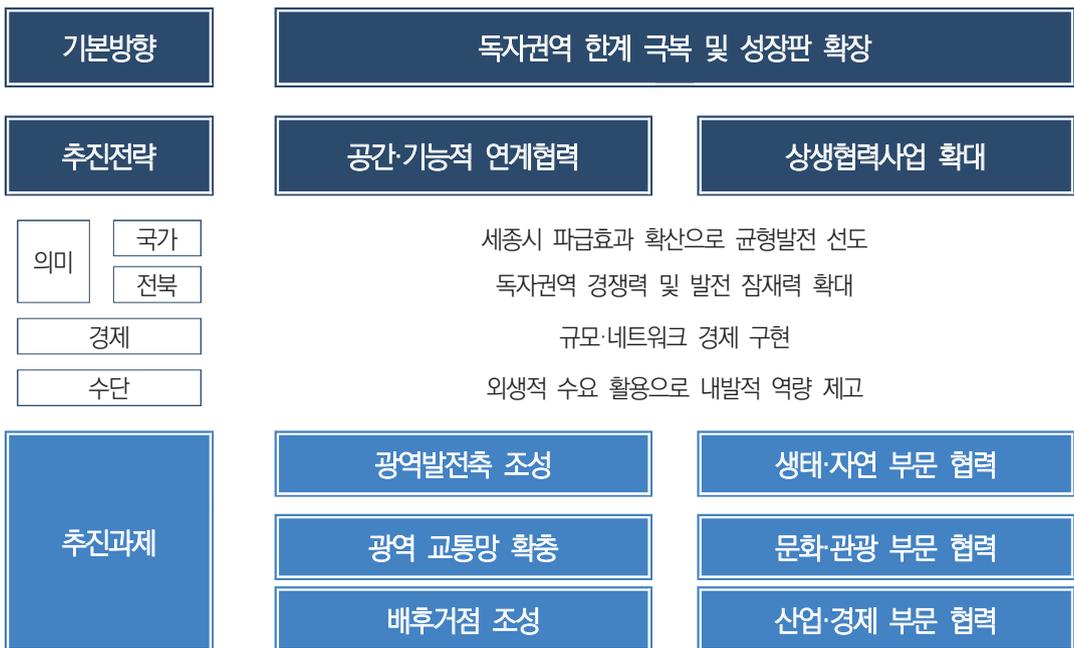
## 2. 추진 전략

### 가. 공간·기능적 연계협력

행정구역의 물리적인 공간적 결합이 어려운 전북의 대외적인 발전 축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과 공간적으로 연계시키고 기능적으로 융합되는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하는데 충청권 초광역 메가시티의 외생적 수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측면의 공간적 연계를 강화시키고 공간 단위의 기능적 연계를 촉진시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 나. 상생협력사업 확대

전북과 충청권이 보유한 자원 중 경쟁적 자원보다는 시너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자원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충청권과 전북의 주요 부문 간 정책 또는 사업 단위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연계협력 사업을 확대시켜 전북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네트워크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 3. 추진 과제

#### 가. 광역발전 축 조성

충청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공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전라북도 내부의 구심점 확보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부광역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충청권과 광역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발전 축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내부 광역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 내부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부 광역화가 필요하며, 내부광역화는 생활권, 도시기능,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완산만경권, 새만금권, 지덕섬진권, 노령동진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완산만경권은 중심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완주군, 익산시가 해당되며, 탄소, 수소 등 전라북도 주력산업의 R&D 및 소재·부품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새만금권은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해당되며, 주력산업 연계 응용제품,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의 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덕섬진권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중심으로 위치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해당되며,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휴양·힐링 및 치유 기능을 수행하며, 노령동진권은 전라북도 서남권에 위치한 임실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이 해당되며, 완산만경권 및 새만금권과 연계한 농생명 기반의 그린바이오 허브 기능을 중심으로 광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1] 내부광역화

구분	시군	주요 기능
완산만경권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주력산업 R&D 및 소재·부품 생산
새만금권	새만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주력산업 연계 응용제품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덕섬진권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산림 기반 휴양·힐링 및 치유
노령동진권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농생명 그린바이오 허브



① 내부 도시 간 연계 발전 축(동서 축, ⇔)

[충청]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 중심지와 충청도청이 이 전해 새롭게 조성된 내포 신도시권을 연계하는 충청권의 도시발전 축으로 행복도시권 내 광역중심도시 간 연계 발전 축이며, 국토 계획 상 동서 4축에 해당된다.

[전북] 새만금권과 완산만경권을 연계해 단일 경제권을 형성시키고 파급효과를 지덕섬 진권으로 확산시키는 전북의 도시발전 축이며, 국토 계획 상 동서 3축에 해당된다.

② 해양·산림 생태 축(남북 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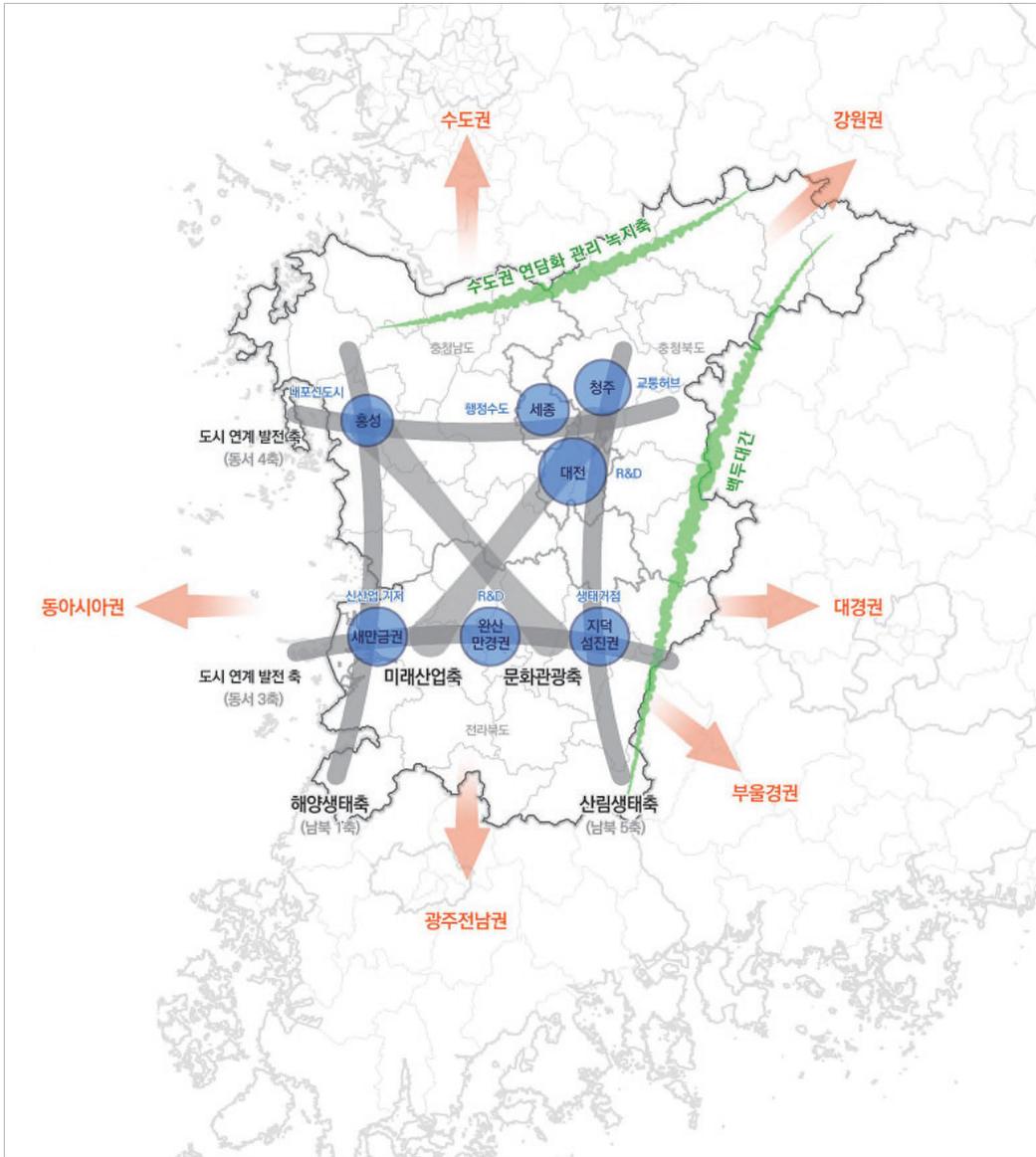
[해양생태 축] 충남과 전북이 보유한 갯벌, 습지 등 기존 해양 생태자원의 공동 이용·활용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하고, 해양 생태자원의 활용 다각화(해양문화, 해양레저, 해양 관광 등)로 경제적 자산화 도모 및 K-해양생태 브랜드를 창출하는 축이며, 국토 계획 상 남북 1축에 해당된다.

[산림생태 축]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정맥(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과 주요 산림 생태자원 등을 대상으로 보전 및 친환경 활용이 조화된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고, 양 권역의 훼손지 복원 및 단절된 생태축 연결로 광역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중부 내륙의 휴양·힐링 거점을 조성하는 축이며, 국토 계획 상 남북 5축에 해당된다.

③ 산업·문화 축(사선 축, 2↗)

[미래산업 축] 전북의 주력산업 중 충청권과의 연계협력이 용이하고, 양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 제고 및 국가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 축이다. 전북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탄소소재 산업과 충청권의 탄소 기반 융복합 산업 수요(친환경 모빌리티, 수송·기계 소재부품산업 등)와 연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충청권 공급, 고령친화형 바이오산업 공동 육성, 과학기술 R&D 및 실증 연계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문화관광 축] 전북과 충청권의 고대 역사적 공동자원과 연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자산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과학기술”이 구현되고, 역사문화자원의 선(線)적 연계로 문화산업의 네트워크 경제를 선도하는 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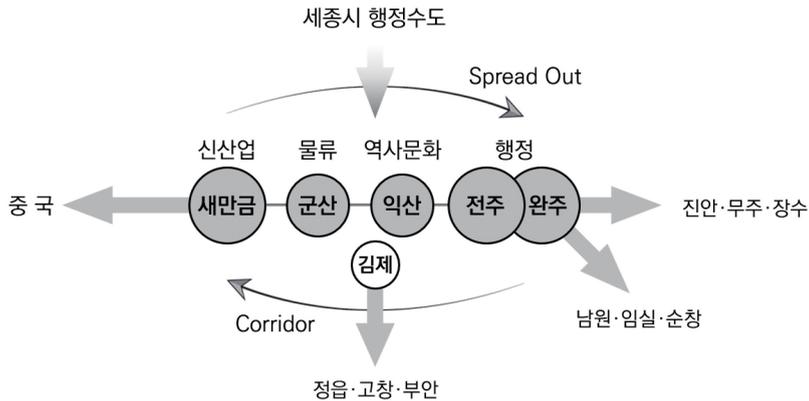
[그림 5-2] 광역발전 축

## 나. 광역 교통망 확충

광역 교통망은 전라북도 내부 광역화 지원을 위한 내부 광역화 지원 교통망과 충청권과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충청권 연계 광역 교통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내부 광역화 지원 교통망

내부 광역화 지원 교통망은 완산만경권과 새만금권의 산업 네트워크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완산만경권과 새만금권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전라북도 내 4개 권역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순환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5-3] 완산만경권과 새만금권 경제공동체

완산만경권과 새만금권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망은 ‘새만금~혁신도시 국도 승격 및 확장’과 ‘전주~군산 산업도로 8차로 확장’ 추진과 권역 간 접근성 제고를 순환교통망은 국도를 중심으로 4개 권역을 순환 형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완주 구이~진안 진안 4차로 확장’과 ‘완주 소양~완주 고산 2차로 개량’ 추진이 필요하다.

#### ① 새만금~혁신도시 국도 승격 및 확장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20.11.24)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새만금권과 완산만경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위치 : 전북 김제시 진봉면(심포항) ~ 완주군 이서면, 규모 :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장 36km)

② 전주~군산 산업도로 8차로 확장

전주~군산 산업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산업용 대형차량의 주 이동로로 첨두시간대 도시연결 교차로 구간 병목현상 발생이 심하며, 완산만경관과 새만금권의 산업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필요하다.(위치 : 군산 내초 ~ 전주 덕진도도동, 규모 : L=45.5km, 4~6차로 → 8~10차로, 일일 교통량 : 72,022대/일)

③ 내부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전라북도 4개 권역을 순환 형태로 연결하는 내부 광역순환교통망 확충으로 권역간 접근성 개선 및 균형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북 1시간 생활권 형성과 권역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지역혁신 인프라 완성과 물류지원 확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광역순환교통망으로 구축해야 한다.(위치 : 완산만경관~새만금권~노령동진권~지덕섬진권, 규모 : L = 101km, 2차로 개량 32.3km, 4차로 확장 36.8km)



[그림 5-4] 새만금~혁신도시 국도 승격 및 확장



## 2 충청권 연계 광역 교통망

### 1 서해안 철도

충남과 전북을 연결해주는 장항선은 현재 복선화전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안산선(여의도~송산)이 2019년 착공하여 추진되고 있어 전북-충청-수도권의 여객·화물의 철도수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맞추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장항선-신안산선 건설 기대효과를 전북과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서해안철도가 건설되어야 한다.(위치 : 새만금(신항만)→부안→고창→영광→무안국제공항→목포, 규모 : L = 141.4km, 복선전철)



[그림 5-7] 서해안 철도 및 충남-전북 연계사업

② 세종 ~ 익산(연무IC) 고속도로 건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2016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예정 중에 있어 충남에서는 세종~논산(논산 IC) 고속도로 반영을 건의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와 연계한 세종~익산(연무 IC)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한 상태로 수도권-충남-전북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세종~익산 고속도로 건설해야 한다.(위치 : 세종JCT(서울~세종 고속도로) ~ 연무 IC(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시, 규모 : L= 43.0km, 4차로 신설)



[그림 5-8] 세종 ~ 익산(연무IC) 고속도로 및 충남-전북 연계사업

③ 서부내륙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착공

전라북도 여건변화(새만금, 전북혁신도시, 익산 국가식품산단)에 따른 물동량 수송에 대비하고 국토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2단계 구간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 구간은 전체 사업비의 1/4수준임에도 1단계(평택~부여)구간보다 10년 뒤 준공계획으로 지역차별적인 상황이다.(위치 : 평택 포승 ~ 부여 ~ 익산 왕궁, 규모 : L= 137.7km, 1단계 94.3km, 2단계 43.4km, 4~6차로 신설)



자료 : 국토교통부(2019), 홈페이지 보도자료(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186](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186)

[그림 5-9] 세종 ~ 익산(연무IC) 고속도로 및 충남-전북 연계사업

#### ④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국제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접근성 향상(인천국제공항, 무역항(대산항, 보령신항), 새만금 등), 서해안 관광자원 활성화, 대중국 여객·물류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평양·개성에서 새만금 및 전라·광주권, 충남의 서해안 관광자원, 대신항의 석유화학단지, 인천국제공항 등을 연계하는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위치 : 평양·개성~충남 서해안(당진·태안·보령)~새만금~호남권, 규모 : L=318km, 4차로 신설)



[그림 5-10]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⑤ 대전~전주간 복선전철 신설

대전~전주간 복선전철 신설을 통해 충청과 전북 지역의 철도소의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의 통행시간 단축 및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원주테크노벨리 등), 관광자원(금산 인삼축제, 대청호, 한옥마을 등) 등 주요 지점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위치 : 대전~금산~완주~전주, 규모 : L = 72.0km, 복선전철)



[그림 5-11] 대전~전주간 복선전철 신설

## 다. 배후거점 조성

세종시는 2단계 조성 완료 후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조화된 복합도시) 완성을 목표로 현재 3단계가 추진 중이다. 세종시와 수도권권이 연담화 될 경우 수충권이라는 거대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연계·거점으로서 세종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전복으로 확산시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배후 중심지를 전북 북부지역에 조성해야 한다.

### ① 법적 근거 마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3조15) 및 제4조16)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도록 배후거점 조성 등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배후 중심지 조성·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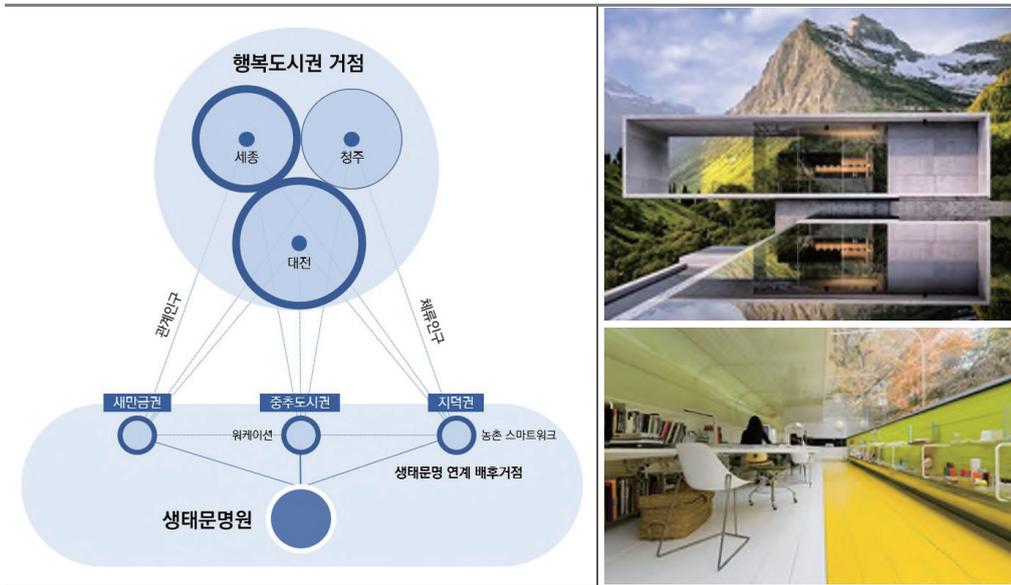
### ② 행정수도 배후 생태문명 거점 육성

완주군 이서면에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문명원을 거점으로 완산만경권 및 지덕섬진권 북부 지역에 전북의 1시군 대표관광지(보석테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마이산도립공원, 반디랜드), 1시군 생태관광지(서동생태공원, 경천싱그랭이에코빌, 지오파크, 반딧불이생태관광지)와 연계하여 생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문명 명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 
- 1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6)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리모트 워크(remote work) 거점 조성

완산만경권 및 지덕섬진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문명 명소와 연계해 자연속에서 원격 근무, 휴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케이션(work+vacation)<sup>17)</sup>, 농촌 스마트 워크<sup>18)</sup> 등 리모트 워크 거점을 조성하여 충청권의 체류·관계인구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림 5-12] 배후거점 조성

- 17)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관광상품(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 18) 비대면 업무형태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촌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업무공간, 주거공간 및 수요자 맞춤형 테마시설 등이 복합된 업무공간

## 라. 생태·자연 부문 연계협력

충청권과 전북의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 권역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자연·생태 부문에서 양 권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은 산림분야의 금남정맥과 수자원 분야의 금강으로 금남정맥을 활용한 산림생태 연계협력사업과 금강 기반의 수생태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 1) 금남정맥 생태문화 명소화

충청권과 전북을 산맥으로 연결하는 금남정맥의 생태문화 자원의 경제적 자산화 및 주변 지역의 인문·사회 자원을 융합시켜 생태문화 명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① 금남정맥 트레일

백두대간에서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으로 연결되는 구간 및 금남정맥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금남정맥과 충청권·전북의 등산로를 연계한 순환형 루트를 조성하여 도보 형태의 트레일<sup>19)</sup>을 조성하는 금남정맥 트레일로 구간은 전북 완주군 ~ 충남 금산군·논산시·계룡시·부여군 ~ 전북 익산시·완주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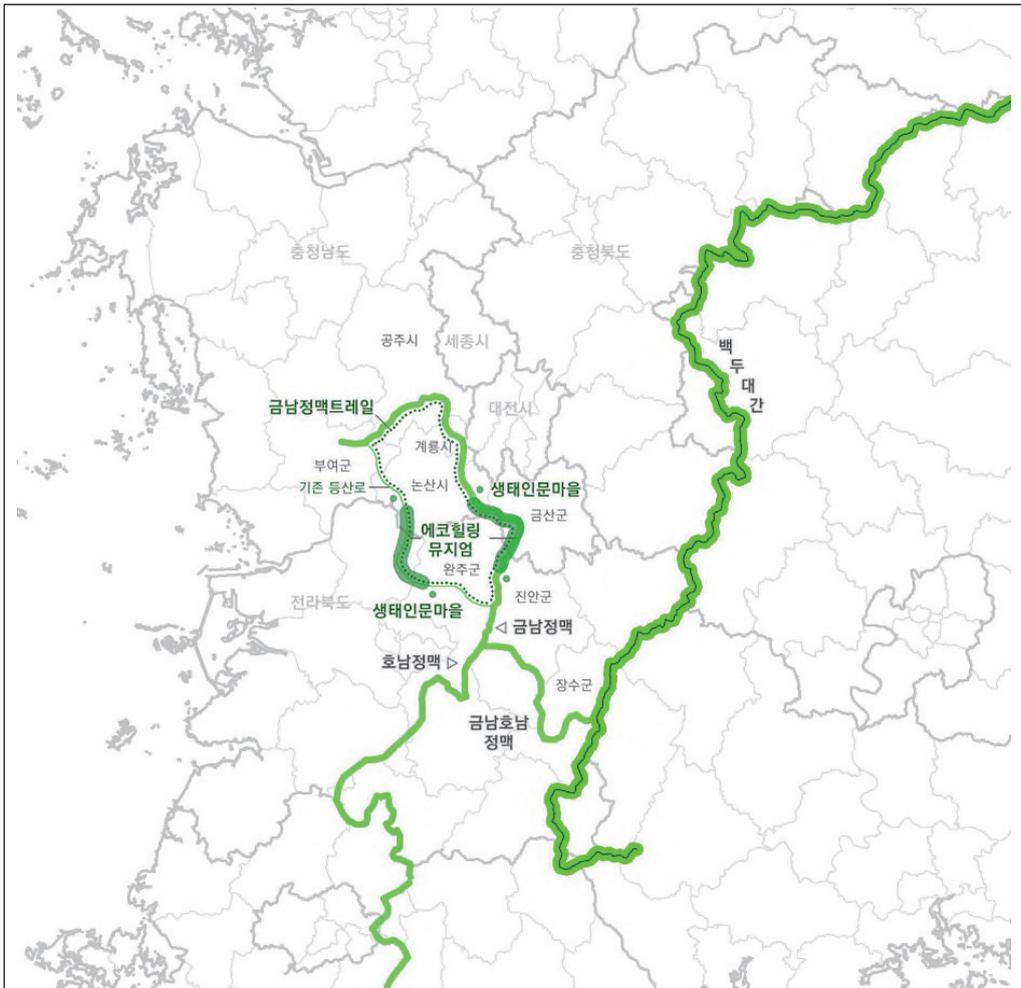
#### ② 금남정맥 에코힐링 뮤지엄

금남정맥 순환형 트레일을 중심으로 숲속에서 즐기는 숲속 힐링공간, 숲속 예술공간 등을 통해 금남정맥 산림생태 환경 자체를 활용하는 개방형 뮤지엄으로 조성하고, 세부 콘텐츠는 자연친화형 북카페 형태의 숲속 도서관, 숲을 배경으로 조성된 미술관, 숲속 포토존 등 숲속 힐링공간이다. 숲속 예술은 금남정맥이 위치한 시군의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단기간의 문화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19) 지역에서 이동 및 농경 등의 활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 가운데, 특히 지역의 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자원 및 심미적 가치를 지닌 길을 발굴, 연결해 지역에 사는 사람과 외부에서 온 탐방객에게 지역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열려있는 도보 여행길

### ③ 금남정맥 생태인문마을

금남정맥에 거주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금남정맥 생태문화와 관련된 기억을 기록하고 자원화 하여 생태 인문학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발굴 자료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금남정맥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문 글귀가 있는 간판, 인문학적 요소가 포함된 안내판 등을 도입하여 인문학 거리를 조성하고, 인문 콘텐츠를 상징하는 묘목 및 조형물 등을 집적시켜 생태인문마을 형태로 연계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3] 금남정맥 생태문화 명소화

## ② 금강 생태환경 복원·활용

비단강으로 불리는 금강은 과거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였으나, 개발·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연환경의 훼손, 서식지 감소, 멸종위기 어류 증가 등으로 수생태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전·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수군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유입되는 금강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 ① 금강 핵심 생태축 및 조류 서식지 조성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 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생태축 개념적 접근이 미흡하고, 시도별 행정구역에 따른 사업개발 및 추진 등으로 광역 생태축 형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충남과 전북이 공동으로 수변지역 조사·평가, 생태적 민감도에 따른 수변지역 유형(보전지역, 복원지역, 전이지역 등) 설정 등을 통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복원 지역 중심의 광역 핵심 생태축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제외지 수변공간의 확보 및 습지 조성, 핵심구간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 등을 시행하여 훼손된 조류 서식지 복원이 필요하다. 하중도내 식생 제거를 통한 휴식처 제공, 하중도 가장자리, 수변지역에 수생식물대 조성, 천변 습지 조성을 통한 안정된 서식지 제공 등을 통해 제외지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금강대교(서천~군산), 옹포대교(부여~익산) 주변의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진 모래톱, 자갈밭 등의 서식지를 조성하여 훼손된 조류 서식지를 복원하는 한편, 금강대교부터 금강하굿둑까지 대규모 군락지역 내 생물종의 안정적인 서식지를 조성하고, 주변부에는 소음 혹은 위협요인의 발생정도에 따라 산책로, 자전거길을 우회 시키거나 하천 양방향에 조성되었을 경우 한쪽 방향은 자연공간으로 전환 등 핵심구간 위협요인 관리에 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 ② 4계절 습지 및 체험·관찰 공간 조성

금강변 논을 매입하여 묵논 형태의 4계절 습지를 조성하되 바닥을 굽는 등의 단순한 처치를 통해 구조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위적인 조치는 최소화하여 자연적인 습지생태계 천이단계(succession stage)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습지공간 감소로 인한 습지 생물

---

감소, 농경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나 습지공간 복원의 이해도 및 사회적 관심이 낮은 현실이다. 또한 생태적 위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관찰소와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습지 생물의 서식 공간을 생태관광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③ 금강변 생활문화 복원

금강변 옛 누정, 포구, 나루터, 정자(누정) 등의 복원 및 활용계획 수립하고, 대표 자원 개발하여 문화여가를 즐기는 핫 플레이스로 활용하고, 곡창지대인 금강을 소재로 금강 예술가 창작 레지던시, 금강 예술체험촌, 마을 단위 생활문화 예술 동아리, 금강 마을 축제 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강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유산, 경관, 아날로그 문화예술, AR·VR·MR 등 디지털 문화를 망라한 실경문화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④ 금강비단 자전거 테마 루트화

금강변의 기존 자전거길을 순환 형태로 연결하여 테마코스를 개발하고, 구간별 자전거 쉼터 조성, 금강 이색 테마 자전거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 운영, 금강권 자전거 종주대회, 마이크 캠프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⑤ 금강천리 투어상품 개발·운영

체류형 투어상품(금강천리 한달살기), 테마형 투어상품(금강 DIY 여행), 맛집형 투어상품(금강 100년 미식기행), 교육형 투어상품(금강천리 인문학 기행) 등 천리에 이르는 금강 투어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금강과 인접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천리 통합관광지도 제작 등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강천리 통합관광지도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제작하고, 지역별 QR코드 삽입, 시군별 문화관광 홈페이지 연계 등을 통해 공동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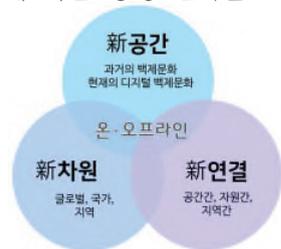
## 마. 문화·관광 부문 연계협력

전북과 충청의 역사적 공동자원과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 추진되었던 단순 문화 관광 복원 및 자원화라는 오프라인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실제 공간, 가상공간) 트윈형 문화관광 강소권 육성이 필요하다. 전북과 충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규모화 된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시계열적 콘텐츠로 연계시켜 네트워크화 된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체험 기반의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1] 디지털 汎백제 문화관광권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백제역사문화권 등 6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였다. 디지털화는 문화 및 과학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며 새로운 교육적 기회와 문화관광 진흥에 사용되고,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으로 디지털 유산은 인간의 지식과 표현의 고유한 자원으로 문화·교육·과학·행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술적·의학적·법적 정보를 포괄하며,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아날로그 자원으로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것이다.

고대 백제문화권의 장소성을 지닌 “부여·공주(충남)+익산(전북)”의 역사문화자원을 디지털화를 통해 하나의 역사문화 공동체로 연계하고 글로벌 디지털 걸처를 확산시키는 汎백제 역사문화관광권을 형성해야 한다.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충청-전북을 지향, 과거 유산을 현재 자산으로 리뉴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다양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연계시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오프라인의 다양한 자산과 유산을 거대한 디지털로 재건(digital reconstruction)하고 시각화하여 물리적 복원을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글로벌 디지털 걸처 확산,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구현하는 汎백제문화관광 강소권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Metaverse)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관광 콘텐츠로서 범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협력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중 역사문화유산(옛 것)과 과학기술(새것)의 융복합 구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MZ세대 주요 소통 창구이자 새로운 관광마케팅 채널로 메타버스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汎백제 관광 유니버스'를 조성하며, 다양한 범백제 역사문화유산 및 콘텐츠를 미디어와도 연계하여 생산하는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 ②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유산벨트

전북, 충청권 지역내 분포한 고대~근대에 이르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인 인문정신 문화와 유형적(有形的), 시각적(視覺的) 유산의 연계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과 충청권내 인문정신문화, 유형시각적 유산의 거점화 및 공동 이용, 역사시간대별 콘텐츠 연계를 통한 인문학적 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① 시와 술과 차가 있는 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삼국, 고려, 조선 및 근대시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전북, 충남의 유형적, 시각적 유산을 탐방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이러한 유형적, 시각적 유산과 인문 유산의 융합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백제시대 역사문화 대표 백제문화권(공주·부여·익산), 고려말 상업, 대외무역 등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내포문화권(홍성·서산·예산 등), 조선시대 주거, 음식 등의 전통문화(전주 등) 관련 시대 유산들의 관광자원화 및 연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백제, 고려, 조선, 근대 시대를 대표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들의 탐방과 함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Archi-Story Tour 개발·운영 등도 검토될 수 있다.

### ② 인문호국정신 문화 K-DH(Digital Humanities) 기행벨트

호국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관광 문화 공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축조했던 성곽 및 산성, 봉수대, 충절과 관련된 지역인물 등의 자원 활용과 가치 제고를 위해 전북과 충청권이 공동으로 학술포럼을 운영하고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5-2] 호국 관련 유적 자원

구분	관방 유적
충남	(서산) 서산읍성, 해미읍성, 부춘산봉수 등, (예산) 예산산성, 임존성, 대흥읍성 등, (홍성) 결성읍성, 홍주읍성, 청룡산 봉수대 등, (공주) 공산성, 홍길동성, (부여) 부소산성, 청마산성 등
전북	(익산) 미륵산성, 낭산산성, 익산토성, (완주) 위봉산성, 배매산성, 시우동 봉화대, (진안) 합미산성, 성쇠산성, 제동유적, (장수) 가야산성, 삼봉리 봉화터

호국 관련 문화자원의 리뉴얼을 통한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으로 호국정신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 투어가 광역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및 디지털 인문학 거점을 조성하고, 호국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 호국문화 체험프로그램, 호국 정신·문화 전시 등의 공동 운영 및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바. 산업·경제 부문 연계협력

전북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수소, 탄소소재, 과학기술, 데이터산업 등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자원 및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 1 신소재산업 벨트

전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수소 기반의 에너지 소재와 탄소를 활용한 부품소재 산업을 충청권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전북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① 수소산업

친환경산업단지(전북+세종) : 전북 새만금 권역(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에서 생산될 그린수소를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여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실증(전북+세종) :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한 수소전기차를 세종시가 구축한 자율주행 실증테스트 기반(자율주행 상용화 지구)과 연계하여 수소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 실증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수소산업 광역화(전북+충남) : 전북에는 그린수소복합단지(새만금), 수소 상용차 생산(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완주) 등의 수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충남은 수소시범도시(전주·완주)와 충남의 수소산업 인프라인 수소용품(수소발생·저장 장치, 수전해·개질 공정장치·축매 등),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수소저장 용기, 압축기 및 디스펜서, 운전장치 등) 등의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충남의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과 수소장비·부품 산업을 전북의 수소생산 및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수소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시 미래 신산업 분야의 연계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수소재산업 벨트

구분	전북		충청
	인프라	연계·협력	인프라
수소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단지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친환경산업단지	세종벤처벨리 산업단지 세종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수소상용차 생산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실증	자율주행 실증테스트베드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그린수소복합단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수소상용차 생산, 수소시범도시	수소산업 광역화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수소 장비·부품 산업
탄소	탄소밸리,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IST전북분원	초광역 탄소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자동차부품·초소형전기차·자율주행시스템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융합형 전담모듈 그린 모빌리티 부품 고기능수송용 금속부품

## ② 탄소산업

초광역 탄소소재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 전북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탄소소재·부품산업 인프라와 세종시의 친환경 모빌리티(자동차부품·초소형 전기차·자율주행시스템), 충남의 친환경 모빌리티(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및 융합형 전장모듈), 충북의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그린 모빌리티 부품, 고기능수송용 금속부품)을 상호 연계하여 전북의 탄소소재 융복합 핵심수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 2] 고령친화 바이오 융복합산업 벨트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해진 고령친화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바이오 기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과 충청권의 바이오 자원과 융복합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바이오 융복합사업 벨트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고령친화 식품·화장품 : 전북과 충청권이 보유한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 중 고령친화 식품·화장품 개발을 위한 소재개발, 고령친화 비즈니스 지원(시제품 제작, 상품화 지원, 입주공간 제공) 등의 연계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고령친화 식품은 천연소재(전북)와 해양바이오소재(충남)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을 거점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R&D 협력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고령친화 화장품 : 남원의 화장품지원센터와 오송의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R&D 협력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림 5-14] 고령친화(식품·화장품) 바이오 융복합산업 벨트

디지털 바이오융합 혁신플랫폼 : 디지털기술과 바이오제품·서비스가 융합된 초정밀 맞춤형 Health Care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고령친화 바이오 식품·화장품과 디지텍트산업<sup>20)</sup>이 결합된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수요기반 디지털서비스 및 연구시설장비(H/W) 실증·지원센터 구축(대덕연구개발특구+전북연구개발특구) 등 테스트베드 설비를 구축하고, 연구혁신 인프라와 디지털서비스 통합 플랫폼 운영과 바이오 제품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전·충북·충남 TP 바이오센터) 등 지역혁신기반 연계를 촉진시켜야 한다.

### 3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벨트

전북과 충청권에서 추진중인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대덕연구단지와 공동으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한 새만금을 활용한 국가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세종시가 유치하여 21년 4월 착공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세계 최대 규모, 투자액은 6,000억원)와 새만금에 조성 계획인 SK 데이터센터(투자액 2조원)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후방산업 공동 육성,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망 구축, 데이터 기반 융합인력 양성 촉진 등을 추진시 데이터산업의 연계협력이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 공동 육성은 데이터산업 연계 그린산단,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부품·장비산업 육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력공급망 연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RE100)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및 인공지능 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하는 SW·ICT 진흥단지<sup>21)</sup> 내 SW연합 캠퍼스에 전북 지역대학 외에 세종시 고려대학교를 공유대학의 형태로 참여시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및 융합인력 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 디지텍트(Dig + tac) : 언컨택, 비대면과 같은 디지털 컨택트를 뜻하는 용어로 다양성을 연결해 주는 기술인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을 말함

21) 새만금 SW·ICT 진흥단지(안) :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SW진흥단지로 지정하고, SW연합 캠퍼스, 디지털융합지원센터 등을 집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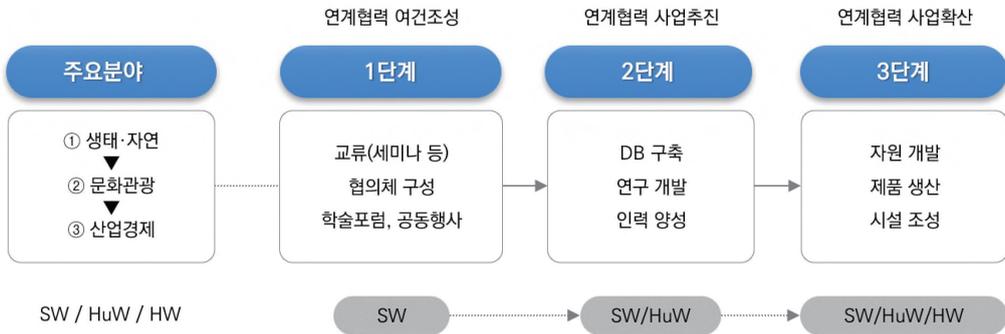
국책연구기관이 집적한 대덕연구단지에 부족한 시범테스트베드·실증단지를 새만금 부지에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새만금 국가실증연구특구 간 상생발전 유도하는 과학기술 공동실증연구단지를 검토할 수 있다. 국가실증연구특구 지정은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적정 부지 확보 후 새만금 공동실증 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구축(산학연 협력 공동실증센터, 실증데이터정보센터, 글로벌 실증공동관, 과학기술 실증 등 실증 수요 R&D 추진)하고, 새만금 국가실증연구특구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창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간 협력체계를 통해서 새만금 국가실증연구특구 기반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표 5-4] 충청권 연계협력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추진과제	세부사업
광역발전 축 조성	[내부] 완산만경권, 새만금권, 지덕섬진권, 노령동진권 [광역] 내부 도시 연계 발전 축, 해양생태축, 산림생태축, 미래산업축, 문화관광축
광역교통망 확충	[내부] 새만금~혁신도시 국도 승격 및 확장, 전주~군산 산업도로 8차로 확장, 내부광역순환교통망(구이~관촌~진안 4차로 확장, 소양~고산 국지도 승격 및 개량) [광역] 서해안철도, 세종~익산(연무IC) 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차공,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대전~전주간 복선전철 신설
배후거점 조성	배후거점 법적근거 마련, 행정수도 배후 생태문명거점 육성, 리모트 워크 조성(워케이션, 농촌 스마트 워크 등)
생태·자연 연계협력	[금남정맥] 금남정맥 트레일, 에코힐링 뮤지엄, 생태인문마을 [금강] 금강 핵심 생태축 및 조류 서식지 조성, 금강변 생활문화 복원, 금강비단 자전거 테마 루트화
문화관광 연계협력	[백제문화] 디지털 汎백제 문화관광권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유산벨트] 시와 술과 차가 있는 역사문화 시간여행벨트, 인문호국정신문화 K-DH(Digital Humanities) 벨트
산업경제 연계협력	[신소재산업] 수소산업, 탄소산업 [고령친화 바이오 융복합산업]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산업, 디지털 바이오융합 혁신플랫폼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데이터산업, 과학기술 공동실증연구단지

## 4.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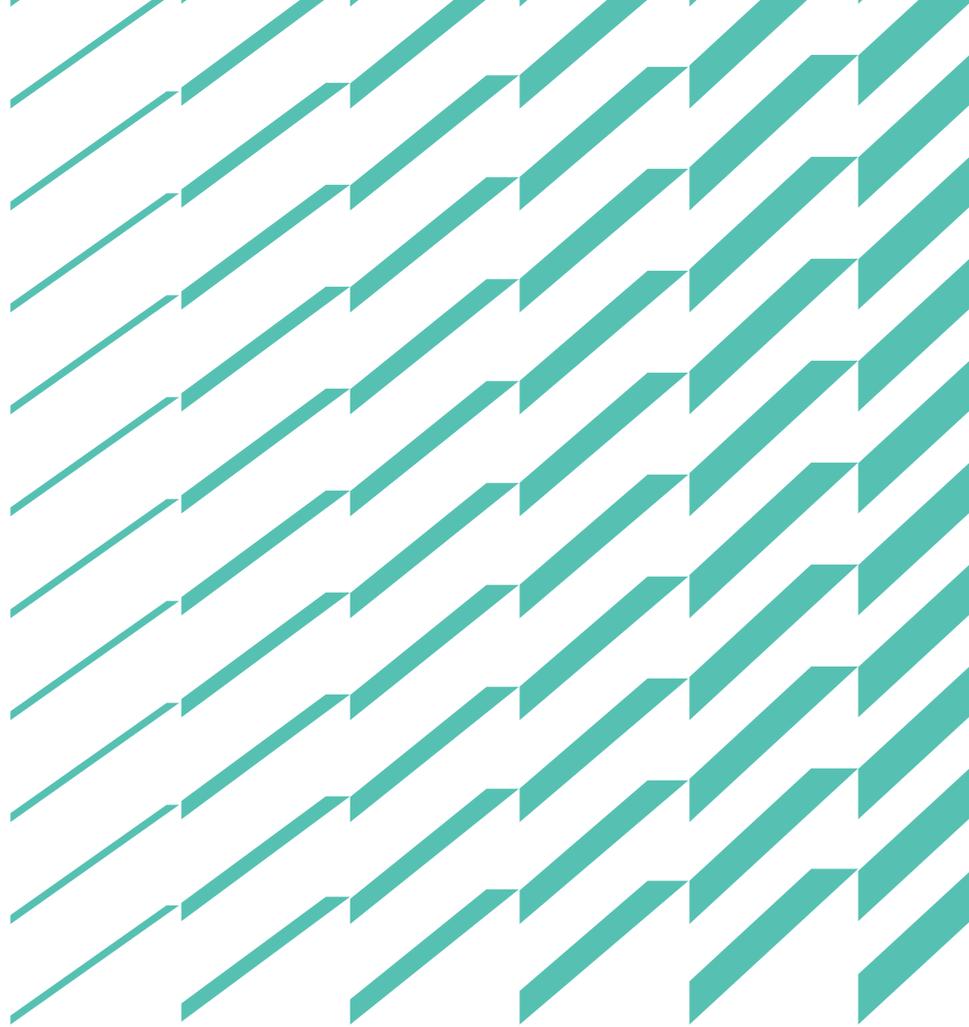
전북과 충청권의 연계협력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양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부문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부문별·단계별 방식으로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2009년부터 추진된 지자체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역 간 상호 이해 부족, 상호 교류 및 협의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의 하향식 사업 추진체계를 지양하고, 전북과 충청권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협력을 위한 기초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규모의 사업 추진과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와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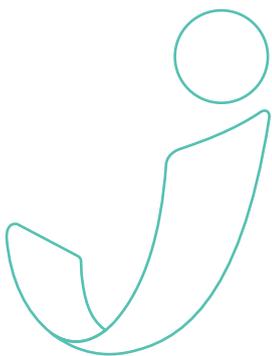
부문별 추진은 양 지역에 공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생태·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시작하여 마중물로 활용하는 한편, 양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문화관광,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 등으로 협력 범위 및 내용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성공적인 연계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단계별 추진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연계협력을 위한 여건·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전북과 충청권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양 지역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공동행사, 학술포럼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연계협력을 위한 여건과 기반이 마련된 후 R&D, 사업주체 양성 등 본격적인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연계협력 분야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초기 단계의 사업은 공통 테마에 대한 DB 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집중하고, 향후 자원개발을 통한 제품생산, 상품화, 공동이용 시설 조성 등 휴먼웨어 및 하드웨어 부문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김창석. (2008). 행정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수립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태환. (2007). 선진외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 국토정책브리프. 제146호. 국토연구원.
- 민성희, 이순자, 홍사흠, 차은혜, 조정희, 유현아 & 임형백. (2019).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박양호 & 김창현. (200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2020).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 성장환, 정연우, 이상준 & 유종훈. (2014).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송정훈. (2013). 해외수도 이전 사례분석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재, 장성화, 김형오, 김재구, 장세길, 김상엽, 이지훈 & 한국환. (2019). 전라북도 광역협력사업 발굴. 전라북도.
- 정희윤, 신창호, 나태준 & 이주일. (2003). 행정수도 기능이전에 관한 연구 : 동경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성재. (2003).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지역학회.
- 황혜란, 강영주, 김강우, 양승희, 염인섭, 이정범, 항상현, 김인수, 민병기, 박천보, 변완희, 이상희 & 강인제. (2018). 대도시권 관점의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 국토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국토교통부. (2021).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 (2020).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 충청남도. (2021).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2014). 2030세종도시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증장기발전 전략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 (2021).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국토교통부 . (2021.4.6).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국토교통부. (2019). 보도자료. "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세종시, 왜 아직 '행정수도'가 아닌가“. (2021.8.1.).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688>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s://www.naacc.go.kr>).

기획연구 2022-01

**행정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전북의 충청권 연계협력방안 연구**

---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5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387-2 9335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귀팔취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